



통권 53호 2011. 겨울

Contents



권두언

- 006 '새로운 충남' 으로 가는 행복한 민관 파트너십 | 민경자

특집 | 도민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 008 노인이 행복한 충남 | 최은희
019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충남 | 모선희
025 청소년이 행복한 충남 | 정하성
031 장애인이 행복한 충남 | 성태규
035 여성이 행복한 충남 | 황창연



충남논단

- 039 대외적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 신동호
053 공장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와 제도적 개선방안 | 오용준



충남 마을 기행

- 067 활기찬 농촌체험을 원한다면? 청양 꽃피마을로 | 정봉희

해외탐방

- 077 해외의 전통시장 탐방 | 임형빈



오피니언

- 092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학습력 강화 | 홍승오
095 민선5기, 장애인 정책에 바란다 | 황영란



충남소식

- 098 도정
107 연구원
112 수질센터
113 연구원



충남의 문화유산

- 117 팔괘정

‘새로운 충남’으로 가는 행복한 민관 파트너십



민경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

우리가 ‘지방화’ 즉 정치·행정에서의 지방화(localization)를 말하기 시작한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지방이 중앙중심의 질서에서 탈피하여 정치 경제는 물론 사회조직 및 문화의 창조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시민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것이 지방화이고 지방자치이다. 이를 통해 중앙의 의제를 단순히 지역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이해와 욕구에 입각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책에 대한 집행도 지역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은 단순히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행정의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제 주민과 지방정부의 만남은 긴밀해 질 수 밖에 없고 민과 관이 함께하는 정치·행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게 되었다. 민관 파트너십은 이제 미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공직사회의 전략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오랜 관료적 전통과 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왔고 그 결과 정책과 주민과의 괴리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직사회는 시민사회에 비해 변화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 시민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고답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조직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로 부터의 투입과 외부와의 인위적인 연결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민관협력체제 결성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공직사회의 혁신의 과정이며, 그 결과는 바로 혁신의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 분야별로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긴 하다. 그러나 이런 기구가 과연 민간참여 정책개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과연 그러한 기구가 민관 파트너십에 의해 구성·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의 참여를 증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과 관이 종래 가지고 있던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개방된 자세가 필요하다. 민간(전문가, 현장실무자, 사회운동가 등)을 바라보는 공무원의 시선과 관을 바라보는 민간의 시선이 좀 ‘쿨’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종래 민간에 대한 ‘형식상 존중과 내용상 무시’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 앞서가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민간의 참여를 ‘귀찮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자주 만나면 소통의 방식이 떠오른다. 소통을 통해 정서적으로 편안해 져야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관의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관이 내용적으로 주도하고 민간의 승인을 유도하는 형식적인 협력체계가 아닌 내용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방식에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단 한 번의 모임으로 뭔가를 결정하기 보다는 몇 차례의 비공식적인 실무모임을 통해 의제 개발에서 프로그램 개발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도록 확대되어야 진정한 민관 파트너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에서 지나친 명망가 중심에서 탈피하여 전문가, 활동가 중심으로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관의 많은 위원회가 형식으로 흐르는 것은 다분히 내용적으로 잘 모르는 고위직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담당자가 해온 시나리오대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위원회로는 민간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기 힘들다.

또한 이제 공무원도 토론에 익숙해 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토론을 통해 사회 이슈를 개발해 내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민간과 소통하는 방식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종래 위계 사회에서 습관화된 침묵은 머리마저 굳게 하고 있다. 이제 공직 사회에도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성장 뿐 아니라 ‘公務’의 질적 향상과 정책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다.

민선 5기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내세우며 출범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야겠지만 가장 시급한 변화는 정책결정방식과 민과 관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아닐까 한다.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을 보는 관의 시각과 관을 보는 민간의 시각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럴 때만이 진정한 ‘민관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불신의 골을 메울 수 있는 길은 민과 관이 서로에게 품고 있는 불만과 편견을 터 놓고 끝장 토론을 통해 상대방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길 뿐이다. 민선 5기 충남이 참여와 소통을 통해 성공하기 위해 하루 빨리 해야 할 일이다.

노인이 행복한 충남

최은희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팀 연구위원

I. 서론

지금은 장수의 시대로 인생 70세를 살기 어렵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벌써 80세에 도달하여, 퇴직 후 수십년의 노년기를 보내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00년에는 인구 대비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를 넘어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에 비해 평균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며, 인구밀도가 낮은 농어촌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2008년에 노인 인구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10년 현재 14.6%를 넘어 노인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기노인보다 75세 이상 후기노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평균수명의 증가가 1980년대 65세에서 1990년대 71세, 2009년 80세로 빠르게 증가¹⁾하여, 인간의 생명연장의 이상이 실현되고 있지만, 어차피 모든 인생은 마지막이 있기에 늙어 죽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 마지막까지 다다른 속도를 줄이고,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고 의미있게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이다. 사는 동안 삶의 질을 얼마나 높게 잘 유지하여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사회적으로 보람되며, 국가적으로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주소를 보면 보편적인 노인들의 욕구충족에 크게 미흡한 실

1) 통계청, 「2007 생명표」, 「2009 한국의 사회지표」 기대수명 추이 및 기대여명 자료.

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생계, 건강, 주택, 소외와 고독, 무료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는 날로 심각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 노인의 절대빈곤, 상대적 빈곤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고 있는데 비해 노인은 소외와 고독 및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치매, 독거, 장애인 등이 증가하고 있고, 노인자살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태이다.

즉,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만2천여 명으로 노인인구의 7.6%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수급자 중 노인의 비율이 25%²⁾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의 빈곤문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65세 이상 장애인구는 77만2천여 명으로 노인인구 대비 15.4%이며, 전체 장애인 수 대비 34.4%³⁾로 나타나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영양급식 및 동작능력이 제한되며, 높은 보건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 1인가구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집단이다. 우리나라 독거노인은 전체노인 중 3.3%의 비율을 산정하여 추계하고 있어 2010년 현재 17만6천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65세 이상 1인가구의 17.2%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충남은 독거노인 6만4천여 명, 요보호노인 5만7천 여명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12만2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충청남도, 2008). 또한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노인 수는 46만9천명⁴⁾의 규모로, 충남도도 치매유병률 8.6%를 적용하면 2만6천여 명의 치매노인이 있으며, 이에 따른 부양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의 수를 산정하면 치매노인과 그로 인한 부양부담을 느끼는 도민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충남은 65세부터 69세까지의 노인 10만명 당 자살률도 84.5명(한국자살예방협회, 2008)으로 나타났다. 전국 노인 자살사망률⁵⁾은 73.6명으로 전체 자살사망률⁶⁾ 24.8명의 3배 이상인 것(보건복지가족부, 2009)을 생각하면 충남 노인인구의 자살률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의 소득보장, 의료, 주거, 장기요양, 고용, 권익보장 정책 등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인 민-관의 역할 및 다양한 사회복지자원에 대해

2) 보건복지가족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09

3)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등록현황」, 2008

4) 「2008년 치매노인 유병률조사」 결과

5) 노인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

6) 5세이상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관리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인구집단인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재고용, 전직 창업지원 및 공적 사적 연금 제도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준비된 노후를 위해 노후설계서비스 지원,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보장 내실화 등을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고 있다.

충남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충남의 노인인구수가 14%를 넘는 시점인 2008년에 충청남도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고, 민선5기 공약 중 노인복지 분야는 기존의 노인복지인프라를 개선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기존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성화 및 다기능화를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 성공적인 고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⁷⁾.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노인복지정책이 사회복지 각 영역의 관계망 속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정책 수행을 위한 행정조직이나 인력은 변화가 없으며, 공무원 은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동향에 따라 노인복지관련 인력 및 장기요양서비스 등 사업에 대해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나 여력이 없다. 특히 보편적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기보호, 주간보호시설이 미흡하며, 노인복지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지원인 경로연금 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에서는 충남 노인인구의 현황을 제시하고,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예산과 함께 제시하여 충남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이 행복한 충남이 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 행복경로당 조성을 위한 공동급식, 직업교육, 신문보급, 정보화 사업 실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독거노인 행복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이동목욕탕, 빨래차 및 여가 프로그램 지원 등

II. 충남 노인인구 특성 및 정책 현황

1. 충남 노인인구 현황

충남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08년 이래 점증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여, 2백만여 명의 인구 중 30여만 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6%로 나타났다

〈표 1〉 충청남도 연도별 노인인구 현황

연도	충남도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2008	2,053,791	293,688	14.3
2009	2,075,249	301,248	14.5
2010	2,090,902	305,345	14.6

자료 : 충청남도 통계자료관. 2010. 6월 기준, 충청남도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09. 12월 말 기준

충남의 노인인구는 30만5천여 명으로 남성노인은 12만3천여 명, 여성노인은 18만1천여 명으로 여성노인이 많으며, 천안시 14.2%, 아산시 8.9%, 논산시 8.1%, 당진군, 공주시, 서산시가 각각 7.4% 순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충청남도 지역별 노인인구 현황

구 분	노인인구 계	성 별		노인인구 비율
		남 성	여 성	
충청남도	305,345	123,690	181,655	100.0
천안시	43,408	17,359	26,049	14.2
공주시	22,461	9,174	13,287	7.4
보령시	19,115	7,792	11,363	6.3
아산시	27,193	11,034	16,159	8.9
서산시	22,650	9,217	13,433	7.4
논산시	24,643	9,925	14,718	8.1
계룡시	2,971	1,078	1,893	1.0
금산군	12,874	5,123	7,751	4.2
연기군	13,155	5,284	7,871	4.3
부여군	18,783	7,642	11,141	6.2
서천군	15,818	6,283	9,535	5.2
청양군	9,263	3,770	5,493	3.0
홍성군	17,866	7,279	10,587	5.9
예산군	19,104	7,924	11,180	6.3
태안군	13,510	5,515	7,995	4.4
당진군	22,491	9,291	13,200	7.4

자료 : 충청남도 통계자료관. 2010. 6월 기준

충남은 노인인구 구조로 보아 전기노인(65~74세)이 60.3%, 중기노인(75~84세)이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노인도 2만1천여 명으로 나타났다.

〈표 3〉 충남 노인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내용	총계		전기노인 (65~74세)		중기노인 (75~84세)		후기노인 (85세 이상)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노인인구	305,345	100.0	184,066	60.3	99,615	32.6	21,664	7.1

자료 : 충청남도 통계자료관, 2010. 6월 기준

2. 충남 노인복지 예산 및 정책 현황

2010년 충청남도의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조 4,373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2010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복지정책과, 도의새마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자치행정과, 충남교육청, 경제정책과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다. 노인분야는 2,328억여 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9.5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충남도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비율
충남 사회복지예산	2,437,344	100.0
저소득층 분야	59,124	2.43
노인분야	232,846	9.55
장애인 분야	67,336	2.76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	181,253	7.44
이주민 분야	422	0.02
보건, 의료 분야	78,133	3.21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1,818,230	74.60

자료 : 충청남도 2010 본예산

노인복지 정책은 법정사업과 도 자체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정사업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서비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도 자체사업은 경로당 운영, 노인여가 및

교육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시설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및 장기요양보험지원,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으로 구분된다. 노인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 68.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시설 지원 6.29%, 노인일자리 사업 5.72%,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 5.61% 순으로 나타난다.

〈표 5〉 충남 노인복지 사업 및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	비율	총 사업비			기타
			국비(분권교부세)	도비	시군비	
계	296,491	100.0	193,507	29,024	76,197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278	0.09	125	125	-	법정사업
기초노령연금	204,417	68.42	164,398	8,003	32,014	법정사업
노인일자리사업	17,079	5.72	8,539	2,561	5,977	법정사업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미사업	330	0.11	249	-	81	법정사업
노인돌봄기본·종합서비스	5,869	1.96	4,343	762	762	법정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3,542	4.53	6,771	3,435	3,335	법정사업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17,875	5.98	-	3,980	13,891	자체사업
노인여가 및 교육사업	468	0.16	-	188	278	자체사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487	0.50	-	298	1,188	자체사업
노인시설지원	18,786	6.29	(8,882)	4,268	5,636	자체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518	0.51	-	379	1,138	자체사업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지원	16,753	5.61	-	5,025	11,727	자체사업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370	0.12	200	-	170	자체사업

자료 : 충청남도 노인장애인과 내부자료.

3. 노인복지시설 현황

충남의 노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185개소, 이용시설 5,767개소로 나타났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 숫자로 150개소에 2,512명의 종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은 13개소이며 140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경로당은 5,579개소가 16개 시 군에 분포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117개소에서 2,449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충남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노인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종사자수	시설수	시설수	종사자수
충청남도	185	5,767	150	2,512	13	140	5,570	117	2,44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10. 노인복지시설현황.

4. 충남 노인복지 관련 제도 및 정책

1) 중앙정부 사업

정부는 노년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 중 경제활동 인구를 벗어난 65세 이상 노인 중 일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정부지원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정비, 치매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 및 치료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하기 위해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권익을 보장해 줌으로써 가치있고 행복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⁸⁾.

2) 충남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사업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은 제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연도로 제1차 기본계획의 평가 및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이다. 중앙정부는 지난 9. 2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계획을 완성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11년 부터 2015년 까지 총 75.8조원을 투자하며 고령화 분야는 28.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제2차 계획의 특징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대응체계로서 다양한 고용기회 제공,

8)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정책 참고자료」, 2009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 예방적 건강관리, 노년기 생애대비 노후생활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일자리 사업, 빈곤예방을 위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 의료비 지출 적정화,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및 노인 권익 증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다음 <표7>은 충남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중 고령화 분야의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사업을 제시한 것으로 2010년 총 예산은 276억원이다. 이는 2009년도 대비 20.5% 증가한 비율로 충남 노인인구 확대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비율의 확대에 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7> 충남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고령화분야 사업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2010 예산비율	비 고
	2009	2010		
【고령화분야】				
계	229,225	276,243	100.0	증20.5
기초노령연금	173,750	205,817	74.51	
체육활동지원	783	878	0.32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2,040	4,417	1.60	
치매노인 종합관리	132	1,114	0.40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10,418	10,664	3.86	
독거노인 보호강화	5,308	8,423	3.05	
노인학대 예방 및 효 문화 조성 등	300	272	0.10	
노인일자리 사업	12,033	17,099	6.19	
고령층 정보화 교육	16.5	10.7	0.00	
저상버스 도입	1,000	1,200	0.43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600	550	0.20	
경로당 운영 활성화	19,100	20,400	7.38	자체
노인종합복지관	3,320	4,850	1.76	자체
노인복지 종합포털사이트 구축 및 운영	45	80	0.03	자체
장수수당	368	456	0.17	자체
노인교육 프로그램 제공	11	12	0.00	자체

자료 : 충청남도 2010년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3) 충청남도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

충남은 2008년도를 기점으로 노인인구가 14.2%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어촌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독거노인의 증가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급증하였다. 이에 충남도는 충남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점검하고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반영한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였다.

이는 맞춤형 노인복지정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하였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안정적인 소득보장, 생산적인 여가문화 활성화, 고령친화 주거환경 조성 등의 4대 분야에 52개 과제를 담아 집행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계획의 2차년도로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구축 및 보호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노인적합형 일자리 지원 및 노인취업 사회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여가문화 체육프로그램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고령친화 주거환경 분야 중 취약 계층 고령자를 위한 자립적 주거기반을 구축하는데 3,059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4)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

2010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마지막 해로 이를 평가하고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시 군 구에서 주민의 욕구 분석 및 정책개발을 통한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후, 시 도 차원에서 시군구계획을 종합 조정하고 시 도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종합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계획수립 중인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충남 16개 시 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노인복지 정책욕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복지인프라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보호 전문기관, 요양시설, 재가복지서비스 및 치매상담센터 지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신 증축, 실버타운 설치가 요구되며, 행정적 지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인력지원, 노인인력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중 한국이 자살율 1위로 이에 대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 대상자 확대 및 독거노인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고, 요양서비스 등급외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향후 전 도

민의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될 것이라 기대한다.

III. 결론

충남은 전국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85세 이상의 후기노령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도심지에 배치되어 있어 농어촌 노인은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가노인의 일상생활과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 사업에 한하고 있고 미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이외에는 스스로 사회 경제적 활동을 통한 일상생활 유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을 위한 다양한 접근의 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은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행복한 노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적, 사회복지서비스적, 문화적 접근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충남은 사회보장적 접근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시설복지와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노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 구심점을 형성하여 복지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적 접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노인부양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족에 있다든가, 사회가 부담해야든가, 혹은 노인 자신의 자립이 중요하다는 식의 단순 논리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고 실제적인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공공부문,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부문, 민간비영리부문뿐만 아니라 더불어 고령친화 산업 분야의 민간영리부문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 2010.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8. 장애인 등록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a. 사회복지정책 참고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b,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최은희, 2008, 충청남도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2010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충청남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자료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2010,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 검토조서 자료.
 충청남도 복지환경국, 2010, 주요업무보고 자료.
 충청남도, 2008, 고령사회 맞춤형복지 5개년 계획.
 충청남도, 2009, 노인실태조사 및 DB구축.
 충청남도, 2010a, 충남비전 2010(안).
 충청남도, 2010b, 제2기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안)
 통계청, 2008a, 2007년 생명표.
 통계청, 2008b 치매노인 유병률 조사.
 통계청, 2009, 한국의 사회지표
 한국자살예방협회, 2008,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실천적 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보고서.

다문화 가족이 행복한 충남¹⁾

모선희 |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문화 가족 이해하기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의 수가 가시적으로 증가하면서 2010년 국내거주 외국인인 123만 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란 한국인과 외국인간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는데,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2010년 1월 18.2만 명이며, 2015년에 26.6만 명, 2020년 35.4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남도의 2009년 말 결혼이민자는 8,003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조선족) 3,736명, 베트남 2,317명, 필리핀 856명 순이며, 거주지역은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순이며 농촌거주가 60%를 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총 국제결혼 건수는 33,300 건으로 전체 결혼의 10.8%이며, 이 중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은 4분의 3이 넘고 특히 농림어업 종사 남성의 결혼 중 외국여성과의 결혼은 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의 급증 추세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국가 차원의 지원정책도 수립, 추진되고 있다.

여러 연구들에 나타난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 및 문제점은 크게 언어 및 문화적 적응,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 대인관계 및 사회적 편견 문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언어는 다문화 가족이 겪는 가장 대표적 문제이며 기후, 음식, 예절, 풍습 등 생활전반에 걸친 문화적 차이도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관습과 문화로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며느리의 업무과중, 시부모의 간섭과 효 강요 등은 사회주의 국가와 모권이

1) 본 글은 필자가 책임으로 참여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2008)의 일부 내용을 발췌·수정하고 보완하였음.

강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 아내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부분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둘째,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가족소득은 100만원 미만 21.3%, 100-200만원 38.4%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알 수 있다(2009 한국복지패널 월평균 가구소득 332.3만원). 셋째, 다문화가족은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어려움으로 사교육비와 양육비용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의 언어발달이 늦고 학년이 고학년이 될수록 학습능력 저하경향이 있고, 이는 학교부적응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시기의 정체감과 가치관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넷째, 친척, 이웃과의 관계 및 사회적 편견문제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국적취득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한국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왔다고 무시당한 경험들이 있고 또한 주변의 이야기나 텔레비전 보도를 통한 이주여성들에 대한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는 자녀양육 및 학습지원(62.7%), 한국어(60.4%), 한국사회 적응교육(51.4%), 가족상담 및 교육(41.2%), 임신출산 지원(38.4%)으로 나타나며 직업훈련에 참여의향도 72.8%로 취업욕구도 높음을 알 수 있다²⁾. 이러한 다문화 가족들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점들은 일방적인 한국사회에의 동화를 요구하기 보다는 이들의 구체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문화 및 사회생활에의 적응, 자녀양육 및 부부갈등, 경제적 빈곤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거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될 경우 사회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농촌의 출산율을 증가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지연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거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글로벌 인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그동안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중앙 및 지방정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각각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다문화가족 관련법으로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

2) 김승권 외 (2009).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법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이 있으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37호)이 제정·시행되면서 다문화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지원, 아동의 보육 및 교육 지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 결혼이민자와 가족구성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2009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여성가족부가 간사부처로서 여러 부처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및 다문화 이해 제고를,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생활정착 지원을,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어 교재개발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 문화적응 지원을, 법무부는 외국인 체류 및 국적 취득 등 업무지원과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및 이수제 도입을, 고용노동부는 결혼이민자 취업을 중점 지원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의 중점 정책과제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정책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는 1단계 입국전 결혼준비기에서는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을, 2단계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 교육,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를,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을, 4단계 역량강화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지원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가족교육·상담, 자녀지원, 직업교육 및 다문화인식개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159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충청남도도 15개 시·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회복지관, 도서관, 농업기술센터, 여성의 전화, 다문화정책연구소 등 관련 공공기관에서도 다문화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로 다문화가족부모모임, 이주여성모임, 출신국가별 자조모임, 배우자 자조모임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충남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을 위한 다문화어울림사업, 방문교육 및 법률지원서비스, 다국어포털 홈페이지(충남다올림) 운영, 책자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으로 결혼이민자의 체류불안문제 해소, 생활안정모색, 이들의 차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통합지원, 사회참여 촉진정책 등이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정책 중복 혹은 실시 기관 간 서비스 중복 문제, 결혼이민자의 개인특성 고려 부족, 결혼이

민자 개인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 미흡, 보건·복지·가족 간 연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입장은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고 동화하여 통합하는데 있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정책을 비빔밥 문화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기존 가족과 다문화가족과의 융합을 마치 비빔밥이 여러 재료가 어우러져 특유한 맛을 만들어가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최근 들어 결혼이민자들의 급증 뿐 아니라 외국인근로자, 탈북자가족, 외국유학생 등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사회도 점차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인식과 수용이 요구되고 있다. 즉, 다양한 민족, 문화, 언어, 습관을 각기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며 상호 공존하는 공생의 존재로 인식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 제도, 사회적 지원정책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욕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부처별 역할 분담, 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 좀 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민간, 민간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다양하게 지원되는 사업 및 정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와 사업제공 주체를 명확히 하여 유사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여야 한다.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거점센터의 지위를 공고히 하며 네트워크 구축, 정보 및 프로그램 교류, 교육 지원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족 입장에서 이들의 문화와 생활방식을 수용·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 및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언어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등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역특색을 고려한 프로그램, 자활/자립 지원 프로그램(직업 및 영농교육)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문화 지원정책은 결혼이민여성의 정착 및 적응에 초점이 맞추어 실시되다가 최근에는 자조모임과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인권 및 사회적 지위, 결혼이민자 2세를 위한 지원 등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다문화의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다문화 지원정책도 현재의 결혼이민자가족 중심에서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등도 포함하는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충남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회적 화합을 위한 교육적 체험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교류센터의 설립이다. 다문화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족, 인종의 사회문화적 소개, 풍물 전시 등에 관한 교육 현장으로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일방적이지 않은 쌍방적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문화를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센터를 구심 축으로 다문화가족의 각종 행사 및 자기역량 발휘를 할 수 있는 강좌개설, 다문화관련 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 연수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사회참여 촉구와 인력활용이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족이 등장하고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다문화가족이 작게는 마을 반사회 참여, 학부모 모임 등으로, 크게는 거주 외국인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자신의 주체적 존재를 인식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능력개발, 자신감 및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민자여성 중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리더를 발굴하고 교육을 통해 학교보조교사, 자녀교육 교사, 관공서, 상담, 의료기관 등에서의 통역, 자조모임의 리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 지원기관들의 인력,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방안이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교육자, 사회복지사, 상담전문가, 의사, 간호사 및 의료직 전문가, 조리사, 이·미용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은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 중 교육관련 사업들은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전문인을 통한 상시적, 중·장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불편한 교통편, 장거리 이동 등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각 면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기초적인 한국어교육 실시하고 교육교재, 강사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넷째, 충청남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의 복지 및 인권보장에 적극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시범

적으로 다문화복지사를 지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전담하고 있으므로 이런 특화된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접목하는 노력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이 행복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나의 문화성을 되돌아 보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로 “다름”에 대한 편견이 많다. 즉, 장애인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한 부모 가족에 대한 편견 등등. 이 모든 것은 단지 나와 다를 뿐이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배우고, 받아들여서 상호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문화가족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충남 만들기 아닐까!!

청소년이 행복한 충남

정하성 | 평택대학교 청소년복지학과 교수, 한국청소년학회장

1. 들어가는 말

청소년은 가능한 미래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에 충실하며 역경을 극복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하는 존재다. 자신의 열정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며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한다. 청소년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상 내일의 가치를 중시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한다. 청소년들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여건과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건을 만들어 주어 자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주어야한다. 충청도청소년들은 조상들이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정신을 바치며 살아온 터전에서 생활하고 있다. 사욕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면서 당당하게 살아왔다. 역사문화성에 비추어 볼 때에 오늘의 청소년은 공익과 정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여야한다. 학업, 놀이, 여유의 일상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생활해 가야한다. 항상 생활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사욕보다는 공익을 우선해 가는 지혜가 절실한 때다. 충청도는 이순신, 김좌진, 최익현, 유관순 같은 애국지사가 많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중시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당당하게 생활해 가야한다. 그러나 오늘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과 경쟁에 지쳐서 많은 불평을 하면서 불만족스럽게 생활해가는 공격성이 강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격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나 현실적으로 학습경쟁 관계에서 따라 오는 모멸감과 부정적인 경쟁력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율성과 참여에 의한 주체성을 영위해 가려 하나 현실적으로 타율과 불참의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은 생존과 생활의 권리를 최대한

으로 만끽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활동, 여가시간, 취미활동 등을 즐기면서 자기 생활을 소중히 여기며 선택한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한다. 친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원만하게 생활해 가면서 특히 장애인과 소외받기 쉬운 사람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야한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당면한 과제를 원만하게 수행해 갈 때에 충청도 청소년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해갈 수 있다.

2. 청소년의 행복 목표와 노력

1) 청소년의 행복목표

청소년은 진정한 가능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성실하게 생활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행복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나쁜 기억과 경험을 일찍 버리고 현실의 불평과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한다. 확신에 찬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영리한 자는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질서 안에 집어넣어 현명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결국 행복을 얻는다. 가슴 설레이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추구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 이유다. 자신의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꾸준하고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시대에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질을 기르고 지식과 능력을 개발해 가야한다. 오늘의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한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열정적인 도전이 절실하다. 일찍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이를 추구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려야한다. 결국은 글로벌시대의 리더로 육성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한다.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줄 알아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현존하는 사물이나 사고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며 접근하는 다양성의 자세가 중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창의성을 키워서 진취적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매사에 자신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야한다. 제4물결 가치를 존중하면서 존재하는 만물을 사랑하며 인간미를 갖도록 한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국제매너를 갖도록 노력한다. 한편으로는 초·중·고교의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대안학교를 확대시켜 개성과 특성을 키워 가도록 한다. 전국의 중심지가 충남인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특성에 따른 행복목표를 설정하려는 일이 중요하다. 청소년기의 신체·생리적 특성 및 심리·사회적 특성과 환경에 대해 이해하여 적절한 행복의 목표와 접근방법을 찾아야한다. 제1차 사회화 기관인 가정에서는 창의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져야한다. 가정에서 만족을 주어 안정성을 찾고 능력을 계발하고 미래를 발전시켜간다. 청소년에게 원만한 인격의 기반을 닦아주어 후일 성인이 되었어도 문제가없도록 해준다. 타인관계와의 신뢰행동을 일상화하며 습관, 예절, 행동을 통해서 원만한 사회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는 바람직한 사회화과정을 습득하도록 한다. 물질적·교육적·문화적·인간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격도야에 순기능을 발현 하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성적제일주의 가치를 추구하므로 경쟁심으로 이기심을 제고 시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여야 행복할 수 있다. 학교는 기본적인 삶과 전인교육의 목적달성을 위한 다양하고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한다. 학교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사회화과정의 중심지이기도하다. 청소년기에는 교우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행복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우관계를 유지하도록 지도한다.

2) 청소년의 자신의 노력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자신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노력에 의해서 개발하여 성공을 견을 수 있다. 노력은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가능하다. 주변의 성인과 선배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관심을 기울여서 청소년의 노력을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어야한다. 그리고 매스미디어에서 모범청소년을 발굴해서 격려해주고 포상해주는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다. 부모와 기성사회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루에 3가지씩 실천하며 기록한다. 일시적인 일은 의미가 없으므로 기록을 통한 관습화를 이뤄 가야한다. 주변의 교우관계, 학습활동, 경제활동, 환경 등의 작은 고민거리부터 차근차근 해결하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껴 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 자신이 잘못했을 경우 죄송합니다라는 예절습관이 생활화 되도록 한다. 부모와 선생님 선배들에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하여 타인지향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한다. 짜증이 나고 신경이 예민할 때에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 주말에는 집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이며 사색하고 여유를 즐긴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정을 쌓아가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신의 포용력과 이해력을 키워서 매사를 오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서 심사숙고하며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해가야 한다. 무한한 자기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 지식을 습득하여 정보를 축적해가는 노력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개발한 경험과 지식이 자신의 합리적인 활용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청소년지도

청소년이 상호이해하며 결정한 개인목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의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도해준다. 청소년지도자의 개입활동의 타당성, 정확성,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입의 수정과 지속성이 결정된다. 변화의 지속인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적응과 진취적이어야 한다. 청소년지도는 지도자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하지 말고 현재의 실태와 청소년 자신의 역량에 알맞게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0년 현재 우리사회 청소년의 방과 후 교육 및 지원활동은 크게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진행하는 방과 후 교육활동과, 학교에서 2개 부처가 진행하는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와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가 있다. 학생청소년의 경우 방과 후 지원활동을 강화시켜서 다양한 욕구와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 각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 자녀에게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체 청소년의 10%를 차지하는 빈곤가정 청소년의 방과 후 지도를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불우청소년들이 견제요인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지도자는 항상 교육과 활동을 지원해 주어 역량을 개발시켜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단위에서 각 기관이 갖는 기능과 역할의 적정 분담, 교육 및 지원활동의 기능적 결합을 강화 시켜간다. 방과 후 교육 및 지원활동의 효과적인 기능 분담과 역할을 결합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상황과 실태를 진단한다. 충남이란 지역사회 중심 관점에서 방과 후 협력 네트워크 전략 및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청소년 방과 후 교육 및 지원활동의 기능중복 실태 진단과 새로운 대안으로 효과적인 방과 후 교육 및 지원활동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충남청소년 지원기관의 기능분담 및 역할협력 방안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미래 과제를 구체화 시키고 방과 후 교육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파견한다.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민간 및 정부 등 공공영역에서의 향후 추진과제를 탐색하여 지도를 해간다. 청소년지도는 가능성의 현실화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준다.

3.나오는 말

오늘의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습 부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부모, 교사를 비롯한 어른들의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으로 가슴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들의 지나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넘치는 열정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바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성격이 공격적이며 감성이 예민하므로 이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다양한 욕구를 해소시켜 주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적절한 지도가 절실하다. 충남청소년을 비롯해서 모든 청소년들은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해갈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앞장서서 보살펴 주어야한다. 일상생활 중 아주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고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생활하며 취미생활을 넓혀 주어서 만족을 느끼도록 한다. 청소년들도 영육간의 원만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균형 있는 교육훈련을 시켜야한다. 충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역발전을 위한 중심이란 특성을 잘 활용 할 필요가 있다. 서해안의 바다와 대북한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이해력과 참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도록 지도해 주어야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무보호자청소년, 독거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하는 일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청소년이 앞장서서 활력 넘치는 농어촌을 건설하며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청소년 자신이 미래를 계획하고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것이 우선이다. 청소년들은 현실에 대한 회의주의와 이상주의를 극복하고 순종하며 경건한 자세만이 참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지도자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려는 마음을 가져야한다. 부모의 소망과 청소년의 소망이 다를 때에는 원만한 대화를 통하여 조절하여야한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전국의 초4~고3 학생 5,4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5.1점으로 OECD 국가(평균 100점)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고달프고 힘든 생활의 결과다. 생활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청소년은 53.9%에 불과하다. 외로움을 느낀다가 16.7%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었다.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은 부정적인 사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긍정적인 자기평가 기준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부정적인 자기평가 기준에는 지나치게 관대해 자존감도 낮다. 실패의 원인을 무조건 자기 탓으로 돌리는 부정적 성향을 지니고 있어 문제다. 상황이 발생하면 해결보다는 회피하거나 체념하는 경우가 많다. 급격한 감정 변화, 손톱 물어뜯기, 섭식장애, 탈모, 피로 호소, 짜증, 수면장애, 무기력, 외로움 등도 행복지수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행복지수가 낮은 아이들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 자존감이 심하게 떨어지는 청소년들은 비행, 폭력, 약물 복용 등의 유혹에 쉽게 빠질 우려가 크다. 부모가 청소년을 행복한 자녀로 만들려면 결점을 사랑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항상 자신감을 갖고 신뢰하면서 생활해 가도록 여건을 만들어준다. 자신이 판단하여 급하게 말하지 말고 청소년의 말을 우선 들어보고 판단하는 일이 중요하다.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같이 청소년과 운동이나 놀이를 하며 정겨운 대화를 나누어간다. 청소년을 지도해 갈 때에 청소년이 부모와 지도자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 바람직한 지도결과가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해갈 수 있다.

참고문헌

1. 정하성, 청소년이해론,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0.
2. 정하성외1인, 청소년문화론, 서울: 21세기사, 2010.
3. 정하성외1인, 청소년프로그램의 실제론, 서울: 학문사, 2003.
4.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통일 후 농어촌청소년 지도방향, 서울: 한국청소년보호지도학회
5. 한국청소년 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6.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010.
7. 홍봉선 외1인, 청소년복지론, 서울: 공동체, 2010.

장애인이 행복한 충남

성태규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장

I. 들어가며

산업화와 각종 환경요인에 의해 장애인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15종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장애인 등록이 매분기 마다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절대적 빈곤의 시대에서 벗어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삶의 질을 중시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장애인도 더 이상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II. 장애인 관련 법 제 · 개정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장애인 관련법의 제 · 개정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법에 의해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부여되었다.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역시 도입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임신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 · 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해야 하게 되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도 제고되었다.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 인식개

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개선하였다.

2007년에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법에서는 법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차별사유로서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도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만3세~만17세까지의 장애학생에 대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이 도입되었다. 현행법의 초·중등 과정에서 유치·고등과정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된 것이다. 전공과 과정과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도입되었고, 장애 대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각 대학교에는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도 법률로 보장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Ⅲ. 장애인복지의 과제

장애인의 복지수요는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장애유형에 구별없이 장애인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정된 삶을 위한 생활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수당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되어야 한다. 모자보건, 성인병 및 노인성 질환의 예방 관리, 응급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예방 등 장애발생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장애예방사업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할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및 복지정보 제공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복지인프라의 확충도 요구된다. 저소득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복지시설간의 기능을 특화하고, 시설간 활용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재가 장애인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활성화, 재활보조기구의 보급, 장애인 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장애인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시설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방향을 생활시설의 서비스 개선이나 시설확충에서 지역사회로의 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시설 신규설치와 예산지원을 놓아준, 도서, 산간지역의 소외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재활전문인력의 보수체계와 복지개선책을 마련하여 직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원활한 이동 및 접근을 위한 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이용 편의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교통관련 제도도 정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강화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 직업적 중증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인적자원을 개발·강화해야 한다. 당사자중심의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무고용사업체 및 공공영역에 선도적으로 장애인고용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에 대응한 직업재활을 확대하고 고용사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해소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과의 통합교육과 정보화로 확대 추진될 필요가 있다. 특수교육의 환경을 조성하고, 특수교육 전문서비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교육 활성화도 강구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인권신장도 모색되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며, 권리에 기반한 복지서비스체계도 구축되어야 한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Ⅳ. 맺는 말

장애인은 정상인과 더불어 같이 생활해야 할 이웃이다. 충남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장애인의 편안한 삶을 실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장애인은 더 이상 수혜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과거 ‘재활’이라는 소득적 복지차원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이라는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여성이 행복한 충남

황창연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새로운 충남? 여성이 행복한 충남!

충남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도정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민선 4기 동안 도정 운영의 모토로 삼았던 ‘대한민국의 중심, 강한 충남’이라는 슬로건과는 사뭇 차이가 느껴진다. 그동안은 경제성장을 통한 강한 충남만들기에 힘써왔고, 그 결과 지역내총생산(GRDP)성장순위에서 전국적으로도 선두 위치를 차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성장만큼 도민들에게 충남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여성들에게 그러하다. 충남은 예로부터 양반문화의 중심지이자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충남에서 여성이 행복하다면 도민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충남’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아쉽게도 민선 5기의 공약사항과 도정 추진방침에는 여성과 관련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도 복지분야 속에 여성이 포함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과 복지문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고, 이와같은 등식이 일정 부분 맞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여성문제는 복지의 한 분야이긴하다는 여전히 별도로 강조되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해 한국의 성평등 점수는 61.2점에 불과하다. 이 점수는 2005년에 비해 3.6점 상승한 것으로 성평등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이 행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수이다. 여성의 힘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충남 여성의 현주소

충남 여성들의 복지와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충남 여성들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사회, 정치, 경제의 각 부분에서 여전히 주류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인구학적으로 보면 충남의 여성 인구는 남성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출산율도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매년 저하되고 있다. 여성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더구나 60세 이하의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의 인구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남아선호의 전통적 가치관이 남아있으며 가정 내 남녀역할에서도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학력 수준은 25세 이상의 여성 중 초졸 이하가 42.2%로 전국의 초졸 이하 여성 평균 25.5%와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생학습 참여율도 남성보다는 12%나 낮아 충남 여성들에게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최근 5년간 2.0% 감소하였다. 대신 60대 이상에서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충남의 산업구조상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 참여 부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시 여성의원 비율이 광역의원 10.0%, 기초의원 17.9%로 2006년 선거와 비교했을 때 광역의원은 거의 변동이 없었고(10.8%) 기초의원은 증가하긴 했으나(12.4%)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광역 14.8%, 기초 21.7%) 여전히 낮았다. 공직사회에서의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도 2009년 조사된 바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4.3%에 불과하였다.

충남 여성의 현주소가 이처럼 취약한 것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 성차별적인 의식이나 문화, 남녀의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은 지역적인 특성과 정서를 고려하여 도민의 공감대에 기초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성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서 100만 충남 여성과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여성이 행복한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을 세워야 하는가?

여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충남은 올해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여성이 행복한 충남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큰 흐름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평등사회를 만들자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으며, ‘남녀가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8개 항목으로 나누어 정책 과제를 수립하였다. 이하에서는 여성 정책 5개년 계획에 담은 주요 정책과제를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여성의 경제적 참여의 확대이다. 2009년 충남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50.6%로 인구의 약 50%가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어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기회확대,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창업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전통적 분야에 대한 여성들의 진출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양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떠안고 있으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여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만5세아 무상보육과 시간연장 보육활성화, 필요할 때 바로바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후도우미지원, 찾아가는 농어촌 보육 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내 양육·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며, 가족 친화적인 직장의 여건과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시도하는 유연근무제의 확산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셋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활동참여가 활발해져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이 사회에서 주체가 되려면 그에 따른 역량 강화와 평생 교육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충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율은 매우 낮아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이 요구되고, 민간단체 혹은 지역사회 활동가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다.

넷째, 여성 폭력에 대한 예방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최근 3년간 충남의 상담 실적을 보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어 여성 폭력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성이나 가정 폭력에서 여성을 보호하려면 먼저 사회적 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여성인권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과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취약 계층이나 소수자의 복지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았다. 아직까지는 여성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다수를 여성이 점하고 있어 이들 취약계층·소수자 여성의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째,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지위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 상대적으로 농업 인구가 많은 충남의 특성을 고려하면 농업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농업인의 육성과 전문 인력을 길러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확대, 마을 공동급식소 운영, 귀농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충남의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추진기반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00만 충남여성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도 의원, 관리직 공무원 등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은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삶의 질을 보듬는 지역정책,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지역 공동체 행복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정책과 발전에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해 지역민 모두가 잘 살고 그러면서 여성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10개의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되었고, 충남에서도 올 해 당진군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 이제 시작한 셈이다. 앞서 제시한 7가지 영역에서의 정책과제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면 여성친화도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충남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여성이 행복해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으면 한다.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지역사회가 행복하다. 200만 충남도민이 행복해진다.

대외적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신동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1장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외적 경제환경변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권의 대출심사 강화와 자금경색으로 인한 금리인상조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환율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내 내수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시키며, 추가하락은 국내 소비 및 기업심리를 냉각시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다. 이러한 기업심리와 소비심리의 위축은 국내경기의 둔화로 이어지고, 여기에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요인이 더해져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과 이로 인한 내수침체는 중소기업의 생산둔화를 야기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은 내수침체와 신용경색으로 가동률과 업황이 크게 하락하였고 어음부도율 역시 급증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로 국제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불안정

으로 중소기업은 막대한 생산차질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는데, 이는 독과점 원자재 공급업체의 일방적인 가격상승에 기인한다. 특히, 납품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 반영이 어려워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예외 없는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험하였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환율상승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상시적인 경영애로를 가중시켜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어음부도율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원유 및 원자재가격 급등은 기업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외부적 충격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출중심의 지역산업구조를 가진 충남의 경우에는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기업환경은 더욱 열악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충격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즉, 경기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경기둔화 시 자금조달여건 및 채산성이 악화되어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는 등 경영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경기침체 시에는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시적인 경영애로정도를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다시 말해, 경기대응력이 부족한 충남도 내 중소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애로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환율변동, 금리변동, 유가 및 원자재 가격변동 등의 대외적 충격이 어떠한 전달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전달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실물현황을 토대로 알아보고, 끝으로 제4장에서는 대외적 충격 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방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대외적 충격의 전달 경로

1) 환율변동의 전달경로

환율변동은 한 나라의 경상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폭 넓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환율상승은 수출가격경쟁력을 높여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수입물가의 상승을 초래하여 국내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환율변동은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경로는 수출입 증감을 통한 경상거래 경로 이외에도 기업의 대외 채권 및 채무의 환산금액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환차익 등 자본거래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림 2-1] 환율변동의 전달경로

일반적으로 환율이 변동하면 수출입단가와 수출입 물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입 기업의 채산성과 매출액은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환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달리표시 수출단가와 수입단가의 조정이 나타나는 이유는 수출기업에게는 수출액을 증가시키거나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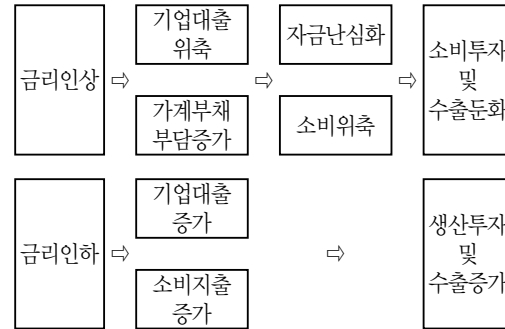
가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해외수출기업과 국내 수입기업은 수입상품의 국내 매출량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채산성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수입단가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금리변동의 전달경로

금리변동은 자본축적을 위한 저축과 기업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물부문과 통화부문에 연계되어 실물경제의 과열된 경기 진정과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는 역할을 한다. 금리의 상승은 실물부문에서 저축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경기를 진정시키게 되지만, 금리의 하락은 가계의 저축 유인을 낮춤으로서 소비지출의 증가와 기업의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이 낮아지게 되어 생산과 투자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에 따라 실물경제에 대한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 온다.

또한 금리의 하락은 자산가격 경로를 통해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동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금리하락으로 주가가 상승하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커져 토빈의 q^b 과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기업이나 개인은 설비투자와 소비지출 증가를 유발하게 되어 경기가 활성화되며, 또한 실물자산인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부의 효과에 의해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계신용 증가를 야기해 가계부채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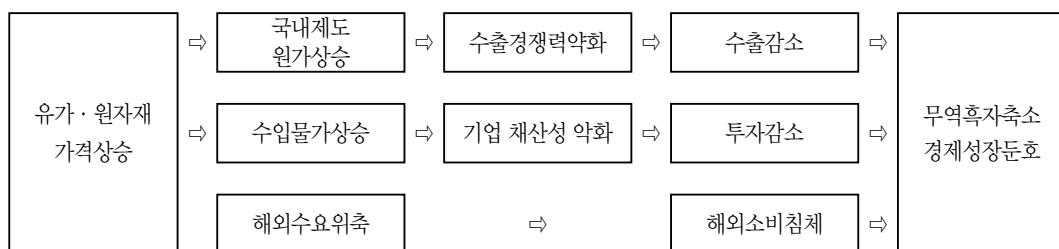


[그림 2-2] 금리변동의 전달경로

3) 유가 및 원자가격 변동의 전달 경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변동은 환율변동과 마찬가지로 수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격변동은 생산원가상승과 해외수요위축을 유발시켜 수출을 감소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원유 및 원자재 수입단가의 상승은 수입을 증가시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 설비투자의 동향을 설명하는 지표로 미국 예일대 토빈 교수가 개발한 개념이다. 기업이 실시하는 설비투자가 얼마나 이윤을 나오게 하는지라는 개념으로 기대이윤(期待利潤)을 설비자금의 조달비로 나눈 것이다. 실제로는 주식의 시가총액과 부채의 합계가 기업의 정래이윤을 반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산의 시가평가액을 설비갱신의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양자의 비율을 구하여 산출한다. 이 비율이 1보다 작으면 기업에는 투자할 자금이 생기지 않고 1보다 크면 투자의 자금이 생긴다.



[그림 2-3]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전달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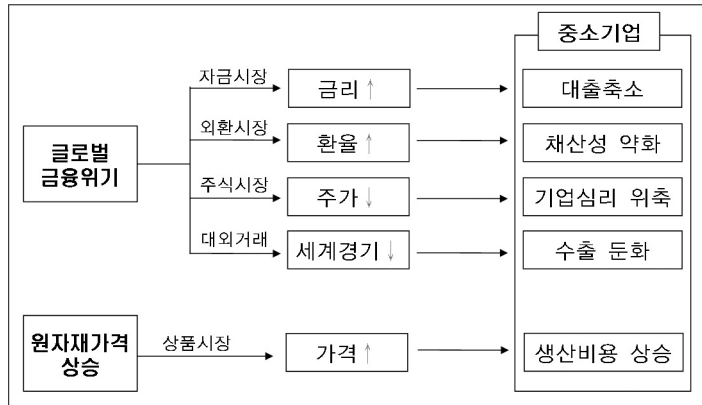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과 같은 대외적 충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그림2-3]에서 보듯이 무역수지의 변동을 통해서 이다.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이 수출, 수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며, 외국의 해외수요를 위축시켜 수출을 감소시킨다. 또한 원유 및 원자재의 수입단가를 상승시켜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수출 감소 및 수입증가는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4)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경제는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세계경기에도 매우 민감하게 동조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 영향력은 상당하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외적 충격이 국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는 매우 복잡 다양하나, 금리, 환율, 주가 및 세계경기 등의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시장에서는 외화 및 원화의 유동

성 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금융권은 안전위주의 자산운용을 할 수 밖에 없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자금경색으로 인해 국내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금리가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둘째,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현상과 달러위주의 시장으로 인해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변동성도 더 크게 나타난다. 결국 환율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내 내수 기업들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 셋째,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주식매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주가급락과 변동성이 확대되어진다. 이는 국내 소비 및 기업 심리를 냉각시켜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세계경기가 둔화되면서 수출둔화 및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하락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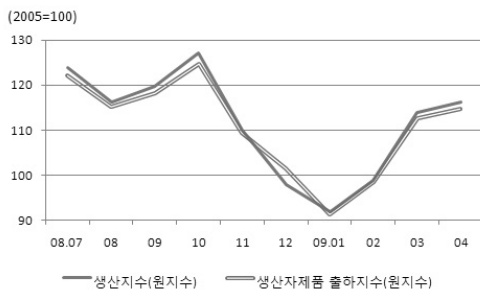
[그림 2-3]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의 전달경로

제3장 대외적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 실물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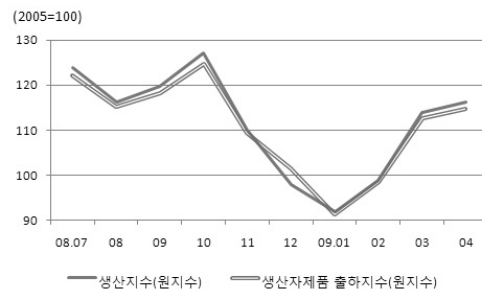
1) 중소기업 산업활동

제조업 부문의 산업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생산, 출하, 재고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악화되다 2009년 들어 점차 개선되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제조업 생산지수는 2008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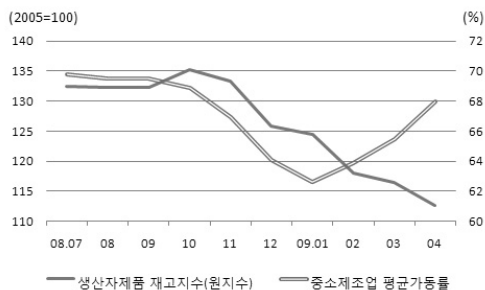
월 123.8에서 2009년 1월 91.8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월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충남의 제조업 생산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2009년 1월 118.5를 터닝 포인트로 하여 금융위기 이전수준 이상으로 제조업 생산이 활발해져 2009년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169.5를 기록하였다.



[그림 3-1]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전국)



[그림 3-2] 제조업 생산 및 출하지수(충남)



[그림 3-3] 재고지수 및 중소제조업평균가동률(전국)

자료 : 통계청

출하 및 재고수준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한 실물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출하지수와 재고지수는 각각 감소 및 증가하다 2009년 들어 실물경기 반등에 힘입어 점차개선 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9년 4월을 기준으로 전



[그림 3-4] 제조업 재고지수(충남)

국의 재고지수는 112.6으로 2008년 4월 132.5보다 낮아진 반면, 충남의 제조업 재고지수는 143.7로 2008년 4월 당시의 128.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3-1] 제조업 산업활동 추이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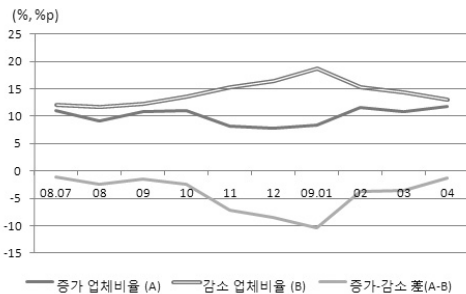
(2005=100, %)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생산지수(원지수)	123.8	116.2	119.6	127.2	109.9	98	91.8	98.8	114	116.2
	생산자제품 출하지수(원지수)	122.2	115.1	118.3	124.8	109.4	101.6	91.3	98.6	112.7	114.7
	생산자제품 재고지수(원지수)	132.5	132.3	132.3	135.2	133.4	125.8	124.4	118.1	116.5	112.6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	69.8	69.5	69.5	68.9	66.9	64.1	62.6	63.9	65.5	68
충청남도	생산지수(원지수)	155.2	154.5	155.9	168.2	146.6	122.6	118.5	137.3	163.7	169.5
	생산자제품 출하지수(원지수)	150.9	146.9	148.9	157.2	137.4	122.7	112	128.8	155	157.8
	생산자제품 재고지수(원지수)	128.6	131.2	131.2	144.5	151.4	141.7	144.1	145.5	140.9	143.7

- 자료 : 한국은행(2004),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2) 중소기업 고용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실물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중소 제조업 고용은 감소업체 비율은 상승하고, 증가하는 업체비율은 감소하는 고용



자료 : 기업은행

[그림 3-5] 중소기업 고용 추이

축소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은 2008년 12월 증가업체비율은 7.9%로 연중 최저수준을 보이다 2009년 3월 들어 2008년 7월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자료 : 통계청

[그림 3-6] 중남 제조업 고용 추이

2009년 1월 들어 감소업체비율은 18.7%, 증가업체 비율은 8.4%로 그 차이가 10.3%p로 고용수준이 가장 악화되었고, 이후 점차 개선

되어 2009년 4월에는 2008년 7월 수준으로 고용상황이 회복되었다.

[표 3-2] 중소기업 고용 추이

(%, %p)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증가 업체비율(A)	11	9.2	10.8	11.1	8.2	7.9	8.4	11.5	10.9	11.8
감소 업체비율(B)	12.1	11.6	12.2	13.5	15.3	16.4	18.7	15.2	14.4	13.1
증가-감소 차(A-B)	-1.1	-2.4	-1.4	-2.4	-7.1	-8.5	-10.3	-3.7	-3.5	-1.3

* : 고용 동향은 월중 종사자수가 전월에 비해 증가(감소)한 업체비율(%)을 산출

** : 산업별, 규모별은 전월대비 증가-감소 차(%p)

자료 : 기업은행

[표 3-3] 충남 제조업 고용 추이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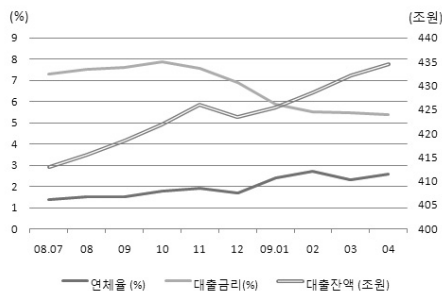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 산업	997	995	984	999	982	921	880	895	926	978
제조업	167	165	166	174	166	167	162	161	153	158

자료: 통계청

3) 중소기업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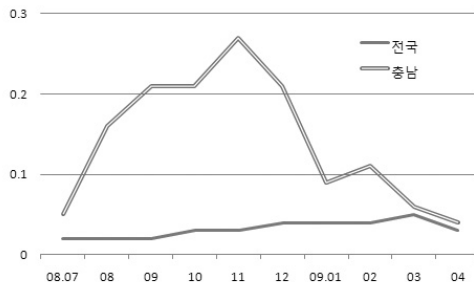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대출금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양호하나, 실물경기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대출금 상환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 4월 대출잔액은 413.0조원에서 2009년 4월 434.4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연체율 역시 동 기간 중 1.4%에서 2.6%로 약 1.2%p 증가한 상황이다.



자료: 한국은행

[그림 3-7] 대출잔액 및 연체율



자료: 중소기업청

[그림 3-8] 자금사정(어음부도율)

이는 실물경기가 점차 개선되는 데 비해, 중소기업들의 금융사정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대출금리는 낮아졌으나, 실물경기 악화로 인해 금리인하효과가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어음부도율은 전국의 경우 2009년 3월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충

남은 2월을 기점으로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물경기악화로 인한 어음부도율은 충남이 전국평균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4] 중소기업 대출잔액 및 연체율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대출잔액(조원)	413	415.5	418.5	421.9	426	423.4	425.5	425.5	432.1	434.4
연체율(%)	1.4	1.5	1.5	1.8	1.9	1.7	2.4	2.4	2.3	2.6
대출금리(%)	7.3	7.5	7.6	7.56	7.56	6.91	5.88	5.88	5.45	5.38

자료 : 한국은행

[표 3-5] 중소기업 자금사정(어음부도율)

(단위 : %)

구 분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0.02	0.02	0.02	0.03	0.03	0.04	0.04	0.04	0.05	0.03
충남	0.05	0.16	0.21	0.21	0.27	0.21	0.09	0.11	0.06	0.04

자료: 통계청

제4장 대외적 충격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1.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탄력 적 운용

1) 경기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및 규모 확대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환율 변동성 확대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켰고, 이는 국내 실물경제를 급속히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경기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도내

중소기업들의 어음부도율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에 충남도는 「2009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계획」에서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다.

2009년 현재, 충남도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판로 수출분야에서 총 6개 사업(약 9,400억원 규모)을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① 경영안정 자금지원, ② 기업회생자금지원, ③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④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 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⑥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사업이며, 이 중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지원만이 2009년에 신규로 시행되었고, 나머지는 2008년도에 이어 시행되는 지속사

업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사업은 단 하나에 지나지 않으나, 공공구매 촉진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의 지원규모(사업비)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촉발 내지는 가중시킨 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과 관련한 환위험관리 및 원자재 구매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경영에로요인 해소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금변과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금융시장의 글로벌화를 고려한다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또한 원자재 및 원유는 산유국의 분쟁, 가격담합, 투기적 수요증대 등에 의해서도 상시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실정이며, 환율 역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언제든지 큰 폭으로 변동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급작스런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환율 및 원자재가격 급등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 및 규모, 그리고 관련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충남도 차원에서 기존 지원의 사업규모를 확대 시행하는 것도 유용한 정책수단이나, 좀 더 적극적인 환위험 관리 및 원자재 확보난을 경감하기 위한 관련 정책발굴이 더욱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기존 지원사업의 탄력적 운용 및 제도적 보완

현행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는 과거 법정관리에 해당되는데, 동 절차는 해당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 가치보다 높고 갹생가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진행된다. 다만, 기업회생절차 중에는 해당 기업이 기존에 받고 있던 각종 정책자금의 모두 끊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아래 관련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경영상의 문제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이 단기간에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침체 시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더욱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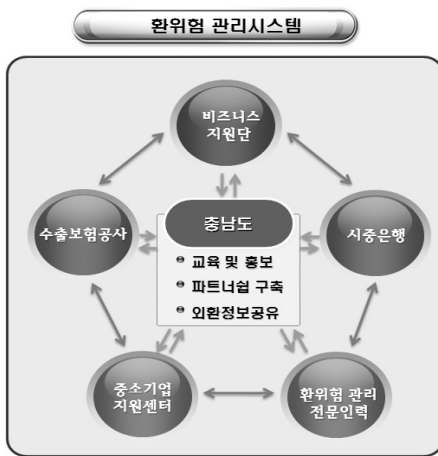
관련하여 현재, 충남도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인「기업회생자금」을 연간 100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동 자금을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환율변동성 및 원자재 확보방안

1) 환위험 관리 지원방안

① 환위험 관리 시스템 구축

대전 충남 중소기업청 산하의「비즈니스지원단(2009년 3월 신설)」은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을 연계하고, 분야별 전문가(전문상담위원)를 상시 배치하여 온라인,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애로를 종합상담하기 위한 기구이다. 비즈니스 지원단에서는 창업/벤처, 법무/규제, 금융/환위험관리, 인사/노무, 세무/회계, 경영일반, 기술/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마케팅/수출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4-1] 환위험 관리시스템

다만, 상담 전문가가 매일 4명씩 상주하여 총 10개 분야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 만으로는 미흡할 경우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가 '현장 클리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위험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컨설팅이 이루어

지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충남도 차원에서 환위험 관리 전문인력풀(Pool)을 구축하고, 수출보험공사, 시중은행, 중소기업지원센터,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한 환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U-환율 컨설팅 지원단 신설 운영

환율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도로 예측이 어렵다. 이러한 예측의 어려움을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외부정보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외환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은행 및 외환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언제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환율상승 시 수출 네고(nego)를 늦추고(laging) 수입 결제를 당기는(leading)시점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수출과 수입의 거래시점과 금액을 맞추어 그 차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통해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하도록 한다. 다만, 환위험 헤지상품은 선물환 거래, 통화선물, 통화옵션, 통화스왑 등 매우 다양하나,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비용측면이나 관련제도의 이해 등이 어려워 수출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해당 전문금융기관들이 헤지규모가 작은 영세수출중소기업들과의 거래를 꺼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도내 중소기업 환위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풀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U-환율컨설팅지원단(U-Exchange Rate Consulting Service Corps)을 구성하여 이메일, 전화, 팩스 등 on-off line 상으로 수출중소기업의 환율관리 전반에 걸친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중소기업청 산하의「비즈니스지원단」에서 환위험 관리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지원하되, 지원단의 규모와 지원시점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③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수출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 보험은 중소수출기업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환율변동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의 환율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증거금이나 담보제공 등의 부담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환변동 보험 인수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수출중소기업의 유용한 환위험 헤지수단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은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 환차손과 환차익을 낮은 비용으로 일정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변동 보험은 비용측면에서 영세 및 중견 중소기업들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선물환과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체 응답기업 중 '환율상승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

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3.4%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환위험 관리를 하지 않거나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이 각각 76.9%, 9.5%에 이를 정도로 환위험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이처럼 매우 유용한 환헤지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환변동 보험을 활용하고 있는 않다는 점은 환위험 관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구노력 역시 중요한데, 첫째,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투명성 및 자기자본 확충과 은행과의 관계유지가 요구된다. 즉,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자금경색 및 안전자산선호로 인한 대출심사 강화에 대비한 신용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정세는 환율 변동폭이 크므로 급격한 환율변동 위험헤지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적극 활용하되, 환헤지를 하지 않더라도 KIKO와 같이 위험성향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의 이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환포지션을 정확하게 도출해 적합한 헤지수단과 거래여부를 결정하고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부담을 통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위축된 실물경기가 다소 되살아나는 국면이므로 기업 나름의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축적인 재고 및 생산관리를 통한 비용절감노력이 요구된다.

[표 4-1] 주체별 환위험 관리방안

정부 및 유관기관	충남도	중소기업	시중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시장 변동성 안정화 개입 • 금융지원 확대 및 모니터링 • 맞춤형 환율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환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위험 관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위험관리 전문인력풀 구축 -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마련 - U-환율컨설팅 지원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사원 중심의 환율 교육실시 • 환변동보험 적극활용 • 신용등급 개선노력 (자기자본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동향 및 환위험 관리기법 공유 • 대출심사기준 완화 • 안정적 파생금융상품 개발

2) 원자재 확보난 개선방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개별 중소기업 들은 원가절감, 경영혁신, 생산성 제고, 제품가 격 인상 등 나름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노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최 근의 원자재 가격급등은 국제적 투기수요 및 고환율, 유가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개별 중 소기업이 감내하기에 너무 부담이 커 공공부문 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시장경제 및 경쟁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되, 중장기적인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원자재 가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안정을 지원하 고, 매점매석 등 시장왜곡에 대한 감시강화가 요구된다. 둘째, 원자재 구매자금의 공급을 원 활히 하고 관세인하 등을 통한 원자재 가격상 승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셋째, 원자재 가격변 동이 합리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입이 시급하다. 넷째, 기업의 생 산성 향상을 통한 원가부담 흡수능력을 제고해 야 한다.

①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원자재 공동구매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 는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다 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간 협력사업(협동 화 사업)중에 원자재 공동구매의 경우에는 이 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원자재 수급난이 발 생할 경우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생산비용 상 승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충남도 차원에서 원자재 수급난이 심 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업종별 수급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원 자재 공동구매를 위한 지원자금을 별도로 마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

원자재 수급난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기업의 61.8%가 원자재구매 대금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도 차 원의 원자재 구매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 등이 수출용 원부자재 구입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영 안정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나, 담보와 신용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큰 실정이다. 따라서 원자재 수급난이 심각할 경우,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입에 대한 특별 정책자금을 한시적으로 마련하여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는 영향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원자재 수입에서 최종생산단계까지의 과정상 특정 생산단계로의 일방적인 가격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단계별 생산자간 협의체 구성 또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애로 등을 상호 협의할 수 있도록 업종별 협의체구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③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원자재 가격 및 수급상황, 도내 산업에 미치

[표 4-2] 원자재 가격상승에 대응한 주체별 지원방안 및 역할

지원 주체	원자재 수급안정	원자재 구매부담 완화 (금융 및 세제지원)	납품단가 반영 현실화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 원자재 방출규모 · 품목 확대(조달청) • 중소기업 원자재 수급 정보시스템 구축(중기청) • 해외 자원확보 강화 및 장기공급계약 확대 • 주요 원자재 중장기 조달 계획 수립(지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 지원확대(중기청) • 원자재 구매자금 보증확대(기획재정부, 금융위) • 긴급할당과제인하(기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납품가격 현실화(기재부) • 민간 납품단가 합리적 반영유도(공정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지식경제부, 국세청)
충남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 • 비상대책반 운영 및 원자재 수급실태 조사 • 원자재구매 특별정책자금 • 저리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협의체 구성 지원(단계별 생산자가 협의체) • 업계 간담회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점매석 감시강화
중소기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 신축적인생산 재고관리 · 전사적 사내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협의체 참여 및 구두발주 지양 •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사례 적극 신고

공장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와 제도적 개선방안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공장 개별입지의 현황과 문제점

(1) 개별입지현황

기업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을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산업입지는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로 구분한다. 계획입지는 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계획적으로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산업단지란 국가산업단지, 일

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을 말하고, 최근에는 공장입지유도지구, 준산업단지 등까지 포괄하는 추세이다. 반면, 개별입지는 기업 스스로가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충남에서는 공장 개별입지가 증가추세에 있다. 2010년 현재 충남에는 전국 공장(96,897개소)의 5.5%(5,328개소)가 입지해 있다. 최근 5년 동안 충남의 개별입지는 연평균 18.8%씩 증가하고 있어, 전국 증가율(15.3%)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증가추이

구분	전국				충남			
	계획입지		개별입지		계획입지		개별입지	
	업체수 (개소)	부지면적 (㎡)	업체수 (개소)	부지면적 (㎡)	업체수 (개소)	부지면적 (㎡)	업체수 (개소)	부지면적 (㎡)
2006년	33,015	266,196,632	84,036	301,872,055	1,023	22,643,467	4,484	64,163,914
2007년	36,355	277,642,151	88,343	312,706,313	1,123	23,940,699	4,744	67,096,407
2008년	38,896	291,143,174	91,124	321,967,748	1,249	28,805,551	4,969	70,212,673
2009년	41,700	307,561,101	94,981	332,914,028	1,391	31,282,231	5,201	67,709,182
2010년	43,235	317,814,300	96,897	337,812,321	1,428	39,513,695	5,328	68,783,505
증가율(%)	31.0	19.4	15.3	11.9	39.6	74.5	18.8	7.2

주 : 충청남도의 계획입지(136개소)는 2010년 6월 현재 국가산단 5개소(26.4km²), 일반산단 42개소(59.3km²), 기타단지 2개소(9.0km²), 농공단지 87개소(13.4km²)이고, 조성중인 계획입지 38개소, 실시계획 수립 중인 계획입지는 6개소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FEMS), 각년도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 가장 많은 공장이 있는데, 전체 공장의 39.3%(38,112개)에 달한다. 충청남도의 경우, 개소수를 기준으로 전국 공

장의 5.5%가 입지해 있지만, 면적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인 전체의 15.5%에 달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장이 유치되고 있다.

〈표 2〉 광역시·도별 공장 개별입지 현황(2010년 6월 현재)

구분	공장수(개)	공장비율(%)	부지면적(㎡)	면적비율(%)
합계	96,897	100.0	337,812,321	100.0
서울특별시	7,787	8.0	2,949,598	0.9
부산광역시	5,761	5.9	11,230,803	3.3
대구광역시	2,889	3.0	4,066,308	1.2
인천광역시	4,324	4.5	12,151,888	3.6
광주광역시	1,056	1.1	2,870,799	0.8
대전광역시	939	1.0	2,298,472	0.7
울산광역시	929	1.0	4,715,769	1.4
경기도	38,112	39.3	97,678,086	28.9
강원도	1,565	1.6	12,639,204	3.7
충청북도	4,649	4.8	33,858,792	10.0
충청남도	5,328	5.5	52,270,292	15.5
전라북도	2,601	2.7	11,611,288	3.4
전라남도	3,219	3.3	14,708,663	4.4
경상북도	6,963	7.2	35,529,561	10.5
경상남도	10,230	10.6	36,890,692	10.9
제주특별자치도	545	0.6	2,342,106	0.7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2010, 공장설립지원센터(FEMIS)

2010년 6월 현재 충청남도에는 개별공장이 5,078개소가 설립되었는데, 이는 작년 전체 실적(5,010개소)보다 높고, 2007년 이후로는 연평균 9.3%씩 증가하였다. 충청남도에서 개별입지는 서산시, 당진군, 보령시, 예산군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개별입지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기업의 선호도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용지 구득이 용이하고, 부지조성원가가 계획입지보다 저렴한 개별입지를 선호한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해온 토지이용규제 및 입지규제가 완화되면서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되고 있는 점도 개별입지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2008년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¹⁾에 따르면, 기업이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원하는 시기(적시성)와 원하는

1) 설문조사대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45개 기업과 전국 도시계획 관련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집단(대학 교수, 연구원, 국토해양부·충청남도청·도내 16개 시·군 공무원, 도시계획 엔지니어링업체 실무자) 등 300명임. 이들에게 설문조사표를 발송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105명(회수율 35.0%)의 조사표를 통계분석 처리한 결과임.

〈표 3〉 충청남도 시·군별 공장 개별입지 현황(2010년 6월 현재)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6	증가율('07대비)
계	4645	4,778	5,010	5,078	109.3
천안시	1,242	1,292	1,357	1,371	10.3
공주시	277	285	293	293	5.7
보령시	152	168	186	189	24.3
아산시	963	1010	1,074	1083	12.4
서산시	124	139	157	162	30.6
논산시	462	474	482	499	8.0
계룡시	17	19	17	17	0.0
금산군	162	176	176	176	8.6
연기군	409	344	353	359	-12.2
부여군	109	97	100	102	-6.4
서천군	97	97	88	88	-9.3
청양군	49	50	51	51	4.1
홍성군	132	137	142	146	10.6
예산군	141	147	164	162	14.9
당진군	263	292	318	328	24.7
태안군	46	51	52	52	13.0

주 : 산업단지를 제외한 공장등록 건수임
자료 : 충청남도, 2010, 개별공장 등록현황 내부자료

〈표 4〉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장·단점

구분	개별입지	계획입지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기·적소 공장설립 가능 • 저렴한 가격으로 용지매입 가능 • 공장부지 처분과 확장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으로 조성, 각종 금융·세제상 감면 •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양호 • 공장설립허가 절차 간편, 용지확보 용이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설립허가 복잡 •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여건 취약 • 환경오염 제어 곤란, 공장설립 반대 민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기·적소에 공장확보 어려움 •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 향후 사업 확장 곤란

장소(적지성)에 공장부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4.5%를 차지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7.2%는 토지 및 공장처분이 용이하고 재산증식 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계획입지보다 용지구입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15.5%)이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2) 개별입지 문제점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Zoning)에 기반한 도시계획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1993년 준농림지역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용도지역 개념이 애매한 준농림지역은 무분별한 공장

입지 등으로 인해 난개발²⁾이라는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였고, 이에, 정부는 2003년『국토계획법』을 제정하여 선계획·후개발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기업규제 완화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공장 입지규제 완화와 공장설립절차 간소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기업이 공장을 개별입지 형태로 설립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개별입지의 주요 문제점은 입지형태, 토지이용, 입지비용 등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입지는 수도권지역 및 대도시 주변지역을 선호한다. 이들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장이 경쟁적으로 도시 외곽에 포도송이처럼 입지하게 되면서 도시기반시설에 무임승차를 하고 개발이익을 사유화하게 된다. 기업은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이 자산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비업무용토지까지 양산하게 된다.

둘째, 토지이용 차원에서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다. 소규모 공장들은 입지계약이 적은 관리지역에 들어서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지역이 과거의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통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더구나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지역 내에서도 분산되어 입지하게 됨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

셋째,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에 비해 입지비용이 낮은 편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당연히 낮은 입지비용을 선호하게 되어 개별입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뿐 아니라, 일부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경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게 된다. 수도권 남부지역 및 충남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는『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을 통해 공장을 설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무분별하게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다. 동시에 개별입지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증가하게 함으로써 결국 지역의 경쟁력도 떨어지게 한다.

2. 정부의 개별입지 정비제도

개별입지와 관련된 제도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기존 공장의 계획적 정비 및 신규공장의 계획적 입지를 위해 2007년『산업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2) 난개발이란 계획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 즉, 도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서 상하수도, 도로 등 이미 확보된 기반시설 용량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는 개발을 의미함.

〈표5〉 개별입지 집적지의 문제점

구 분	문제점
입지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지역 및 대도시 주변지역 선호 • 관리지역 중심으로 입지
입지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입지는 계획입지에 비해 낮은 입지비용
내부도로 및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자체가 부족하고, 직원통근이 어려운 상황 • 물류처리의 제약으로 생산활동 뿐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도 저하
진입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진입도로를 미확보 • 물류처리에 제약을 받고 사고 위험을 내재
녹지 및 공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야보다는 산지를 개발하여 녹지를 자체적으로 미조성 • 필수시설(도로 등)의 부족으로 녹지나 공원 등에 관심 저하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 경관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난개발, 환경문제, 주변 지역과의 토지이용 갈등 • 산업쓰레기 투기, 폐업공장의 방치 등
소방 및 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사면에 대한 방재시설 미비 • 협소한 내부도로로 인한 소방차량 진입 곤란 • 공장의 과밀로 인한 화재 위험 등

자료 : 반영운, 2009, 개별입지 집적지의 준산업단지 조성전략, 국토 통권 328호, 국토연구원.

도입된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가 있다. 공장입지유도지구는 신규 입지수요를 관리하는 차원인데 비해, 준산업단지는 기존 개별 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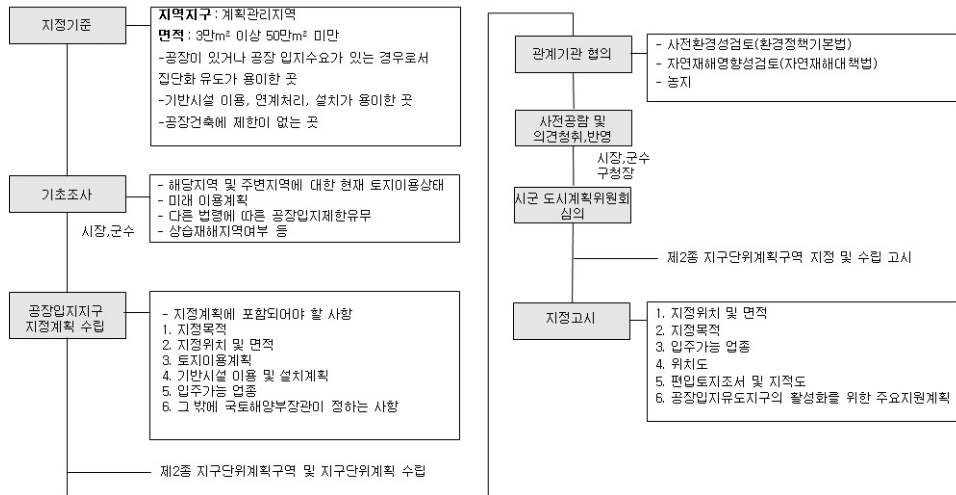
(1) 공장입지유도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는 2006년 9월 재정경제부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며 친환경적인 계

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장입지유도지구는 공장설립 요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여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 50만㎡ 이하의 범위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³⁾이다. 공장입지유도지구는 30만㎡ 이상이고 50% 이상 공장을 유치한 경우, 산업단지에 준해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다.

3) 공장설립 시 사전환경성검토 등과 관련특례가 인정되는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공장의 집산화유도가 용이한 지역에 대해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정하게 됨. 이를 위해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해야 함. 또한, 기반시설의 이용, 연계처리 또는 설치가 용이하고,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어야 함.



〈그림 1〉 공장입지자유도지구 지정절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자유도지구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준산업단지와 달리 토지수용권이 없고, 국고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장입지자유도지구를 운영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업시행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지정할 경우 지가상승의 우려가 있고 국·공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지정할 때는 장기간의 소유권 제한으로 인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 또한, 지구내 도로망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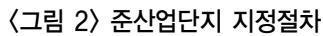
(2) 준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도시 또는 도시주변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노후·불량 공장 밀집지역을 재정비하는 일종의 공장 뉴타운으로서 공장 밀집지역을 재정비해 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규모 개별공장 밀집지역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개발면적 3만㎡ 이상, 5개 공장 이상 밀집지역, 공장 밀집도 개발면적의 50% 이상, 토지소유자·공장 소유자 등 1/2 이상 동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최근에는 준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준산업단지 내 공장의 건폐율도 기존 70%에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다른 산업단지와 같은 수준인 80%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준산업단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우선, 개발가용토지



구분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
지정대상 용도지역	•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지정면적 기준	• 3만㎡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3만㎡ 이상 6만㎡ 이하	• 3만㎡ 이상 50만㎡ 미만
밀도· 여건 기준	•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50% 이상	• 공장이 있거나, 공장의 입지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집단화 유도가 용이한 곳 • 기반시설 이용, 연계처리, 설치가 용이한 곳 • 공장건축에 제한이 없는 곳
소유자 동의 요건 유무	•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 명시요건 없음
국가 또는 지자체의 비용보조	없음	• 요건 충족시 일부 보조(50%이내) • 지정대상면적 30만㎡ 이상, 공장부지면적 50%이상인 경우 • 간선도로, 녹지시설, 전력·통신시설 등의 건설비용에 대하여 비용의 50%
지정효과 주 요내용	• 별도 특례규정 없음 • 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계획법 적용특례 준용	• 지구내 공장설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면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시장·군수가 결정, 계획필수내용 범위 축소 •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시 공장설립 가능 • 연접개발제한 적용 예외 인정

가 부족하다. 준산업단지 지구지정의 규모가 기존 공장면적의 50% 이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제외하고 신규로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즉, 밀도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준산업단지 지정계획 역시 기반시설을 설치할 토지를 분담하는 문제, 기반시설 정비비용 등과 관련된 입주업체간에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다. 준산업단지는 신규공급이 아닌 기존공장의 정비를 목적으로 토지면적의 1/2, 공장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승인권자에게 지구지정 요청을 하는 민간주도의 정비방안이다. 그러나 준산업단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규정 및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민간에 의한 준산업단지의 현실적인 실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개별입지 정비방안

개별입지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별입지 정비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개별입지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개별입지 정비제도의 적극적 활용

현재 공업용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용지확보가 어렵고 개별입지 공장에 의해 자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투자비용의 효율성도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도로와 환경정화시설 및 지원시설이 일정수준 갖추어진 준산업단지로 정비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개별입지를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집단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개별입지를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가능지역을 조사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함으로써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만약, 동일한 지역 내에서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다수의 부지가 선정될 경우에는 특정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우선정비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후보지 평가기준으로는 공장의 집적도(지정가능면적 대비 공장부지면적비율), 업종별 유사도(등록공장 기준), 도로근접도(IC,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우선정비지역은 구역계 설정을 위해 기반시설여건, 등록공장현황, 자연환경여건, 사회경제여건, 개발제약여건, 관련계획 검토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표 7〉 구역계 설정의 고려사항

구분	주요 고려사항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여건	진입로, 내부도로, 도로율, 녹지율, 공원녹지, 주차장 등	○	△
등록공장현황	등록공장수, 밀집도, 종사자수, 공장노후도 등	○	△
자연환경여건	지형, 지세, 표고, 경사도	△	○
사회경제여건	모도시와의 접근성, 교통시설 접근성, 주변취락 등	△	○
개발제약여건	각종 보호구역, 소음, 상수원, 용도지역·지구	△	○
관련계획 검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	○
기타	주변 토지이용, 지구의 정형성, 자연재해가능성 등	○	○

이 과정에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건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개별입지 정비제도는 공급적인 측면에서 사업성 확보, 재정적 지원의 근거,

기업이 요구하는 공장입지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지원이나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못하다.

〈표 8〉 개별입지 정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구분	문제점	개선방안
준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가용토지의 부족 • 사업성 확보의 문제(토지면적 1/2 확보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용적률 완화규정 및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근거 미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제한규정(기존공장 등록면적의 50% 범위)을 완화하여 실제 신규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민간참여를 활성화 •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규정 마련, 민간의 사업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공장입지유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에 대한 지침의 부재 • 사업시행수단의 부재 •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후의 장기 미시행시지가양등의 우려 상존 •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입지유도지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 제정(입지기준, 환경적기준, 기반시설 설치기준, 건폐율, 용적률 등) • 사업시행수단의 명확한 규정 필요 • 국가지원의 확대(현재 지원요건 완화등)

우선, 준산업단지의 제도적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행주체인 민간부문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구안에서 충분한 개발가용지를 확보하고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하며,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공장입지유도지구는 법적·제도적인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유도지구의 계획수립기준과 사업시행수단을 명확히 제시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2) 개별입지를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방안 마련

공장의 산발적인 입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조성된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으로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입지의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고 입주 비용을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임대위주의 계획입지 공급확대를 공장 난개발지역의 재정비와 연계시켜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유치의 입지보조금을 활용하여 계획입지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개별입지에서 계획입지로 입주시에 입지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둘째, 특별법상의 인센티브 존(Incentive Zone) 개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는 낙후지역 5개 군(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⁴⁾ 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법인·소득세 3년 100%, 5년 50%) 및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계획입지로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셋째,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조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입지로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낙후지역 지원조항에 충남 서남부권 기업입지 지원혜택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넷째, 생태산업단지(EIP: Eco-Industrial Park) 시범사업지구를 조속히 조성하여 개별입지 뿐 아니라 기존 계획입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생태산업단지는 생태계의 먹이사슬구조를 산업단지에 적용,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배출을 제로화(zero emission)를 목표로 입주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열, 폐수 등에 대해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제공해 원료나 열원, 에너지원 등으로 재사용하도록 지원한다. 또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배출기업의 폐기물처리비용과 수요기업의 원료 구입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순환형 산업단지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업의 생태산업단지 참여 확대를 위해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⁵⁾과 결합하는 전략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반영운, 2009).

넷째, 임대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청남도를 포함한 우

4)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면 지역특화 발전 추진 및 정주여건 개선, 민자 유치 활성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됨.

5) CDM은 탄소배출을 높이는 생산에 탄소배출권 구입을 통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배출권을 판매하는 개도국에게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체제임. 청정생산개발체계(CDM)는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따라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리나라의 산업입지 공급방식은 분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입주업체에게 있어 초기 자금부담이 큰 분양형 산업단지보다는 입주자 부담이 적은 임대형 산업단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대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과 지가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표준형 임대공장을 공급하는 방안과 민간이 임대산업단지를 짓고 충청남도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개별입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입지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장입지 관련제도는 도시(군)기본계획, 산업입지공급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이 있다.

우선,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공장입지허용량과 관련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물량을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물량이 과거추세방식에 근거하여 과다하게 추정되다 보니 실제로 개별입지를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입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성격을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의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의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테면, 충청남도 산업입지공

급계획에서 개별입지 총량을 지역별 단계별로 규제하는 것이다.

둘째, 충청남도는 개별 시·군에서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제도를 운영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별입지의 입지기준, 환경적 기준, 기반시설 설치기준,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가칭)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위원회 검토 심의 통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침 제정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시한다면, 효율적으로 공장입지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 공장입지 관련제도(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체크리스트로서의 검토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공장입지 및 구역 지정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개발행위허가제 운영지침(중점관리대상지역 지정, 영향권 검토범위 확대, 사전체크리스트 마련 등) 마련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사업법과의 인·허가 기간의 통합 및 단일화를 유도하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을 지방으로 위임하며,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개발행위허가규제 관련제도를 성능적인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표 9〉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

단기적 적용방안	중장기적 적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항 제시(기본 계획 수립유무와 관련) • 계획수립절차의 간소화 • 사전체크리스트로서의 검토범위 설정 •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서 공장입지 지양을 위한 행정적 대책 마련 • 개발 인·허가 단축을 위한 사전체크리스트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법과의 위상 및 역할관계의 정립을 통한 규제 항목의 일관성 유지 • 관련 사업법과의 인·허가 기간의 통합 및 단일화 유도 • 지구 및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면적요건을 성능적 요건 변화 유도 • 개발사업 관련법과의 통합을 통한 규제의 단일화 유도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규정의 확대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의 지방위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능적 지침전환을 위한 기존지침의 유연한 적용(심의위원의 자율성 보장 및 회의록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개발행위허가규제 관련제도를 성능적 규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 및 구역지정의 융통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구역지정의 융통성 확보를 위한 세부항목 개정

우선,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경직된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지침과 개발행위허가 관련제도를 성능적인 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개발 인·허가 단축을 위한 사전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해 협의규정을 확대를 하며, 나아가 입지 및 구역지정의 융통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제도는 충청남도^가 중심이 되어 계획수립절차 간소화 및 계획권한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10〉 비도시지역 공장입지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주체별 개선방안

중앙정부 주도 개선사항	지방정부 주도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절차의 간소화 • 개발사업법과의 위상 및 역할관계의 정립을 통한 규제 항목의 일관성 유지 • 관련 사업법과의 인·허가 기간의 통합 및 단일화유도(사업법의 통합) • 지구 및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면적요건을 성능적 요건 변화 유도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규정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의 지방이임 실현 • 제2종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개발행위허가규제 관련제도를 성능적 규제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주요사항 제시(기본 계획수립 유무와 관련) • 사전체크리스트로서의 검토범위 설정 •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서 공장입지 지양을 위한 행정적 대책 마련 • 개발 인·허가 단축을 위한 사전체크리스트의 작성 • 관련 사업법과의 인·허가 기간의 통합 및 단일화유도(행정절차의 통합 유도)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협의규정의 확대를 위한 주요 협의사항의 마련 • 입지 및 구역지정의 융통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마련 • 성능적 지침 전환을 위한 기존 지침의 유연한 적용(심의위원의 자율성 보장 및 회의록 공개)

4. 맺는말

산업입지는 기업이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이다. 기업이 공장용지를 취득하는 방법은 기업 스스로가 공장건설에 필요한 입지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개별입지와 계획적으로 조성해 놓은 산업단지를 분양받는 계획입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개별입지는 원활한 토지매입을 위해 대부분 비도시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다보니, 난개발과 환경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공장의 개별입지로 인한 공장 난개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장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기존 공장의 개별입지를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가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조사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두 번째는 개별공장을 계획입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계획입지 입주기업에 대한 이전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등의 공장입지 인센티브존(Incentive Zone)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공장 개별입지와 관련된 제도(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등)를 개선하고, 시·군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장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비도시지역의 공장입지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우선,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계획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지침과 개발행위허가 관련제도를 성능적인 규제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사전체크리스트로서 검토범위를 설정하고, 입지 및 구역 지정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개발행위허가제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공장입지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의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체크해야 하고, 행정기관도 사업주가 이런 판단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중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장입지 가이드라인은 「(가칭)충청남도 개별공장 입지에 관한 위원회 검토·심의 통합지침」을 제정하여 제시하고, 충청남도 산업입지공급계획에서 개별입지 총량을 지역별 단계별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6)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시 사전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규제항목에 대해서 사전체크리스트를 지자체에서 작성하여 사업주가 미리 외부효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이때의 체크리스트는 2단계로 분류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 가부를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예비적 체크리스트'와 사업의 진행시 필요한 '계획적 체크리스트'로 구분함. 예비적 체크리스트는 사업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주요 제한 요인을 확인하여 사업시행의 리스크를 줄 일 수 있는데 목적을 두고, 계획적 체크리스트는 계획의 질(quality)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륜희, 2010, 개별입지의 계획적 정비방안, 포럼발표자료, 토지주택연구원
- 반영운, 2009, 개별입지 집적지의 준산업단지 조성전략, 국토 통권 328호, 국토연구원
- 오용준외, 2008, 비도시지역내 공장입지관련 개발행위허가와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이성룡외, 2009, 공장 난개발의 원인과 대책, 경기개발연구원
- 이재우, 2008, 충남서북부권 준산업단지·공장입지유도지구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충청남도, 2010, 개별공장 등록현황 내부자료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해당년도, 공장설립지원센터(FEMIS)

활기찬 농촌체험을 원한다면? 청양 꽃뽕마을로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꽃뽕마을과의 인연은 이렇게 시작되고

지난 가을호부터 연재된 ‘충남마을탐방’ 편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숨겨진 충남의 마을을 계속 소개하라는 지령이 떨어졌다. 어떤 마을을 소개하면 좋을까 하는 고민으로 시름시름 앓던 10월 어느날, 연구원에서 청양에 위치한 ‘꽃뽕마을’과의 업무협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했다. 더구나 업무협약식은 물론이고 전 연구원이 함께하는

충남 마을 기행 2 - 꽃뽕 마을

농촌봉사활동도 계획되어 있던 터여서 그 기쁨은 더욱 컸다.

사실 청양 꽃뽕마을은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맥문동 축제’로 유명해진 마을로써 농촌체험관광의 기회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란 필자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이것이야말로 일거양득!



〈사진 1〉 꽃뽕마을 01



〈사진 2〉 꽃뽕마을 02



〈사진 3〉 꽃뽕마을 03

등을 주로 재배하며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풍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꽃뽕마을(이장 이춘복)은 청양의 명산 칠갑산 남단 정혜산 자락이 감싸고 있는 분지형 농촌마을이며, 1987년부터 개칭된 화산(花山)리를 순 우리말인 ‘꽃뽕’로 바꿔 마을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 꽃뽕마을에는 약 75가구 22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쌀, 맥문동, 밤, 구기자, 표고버섯



〈사진 4〉 산 전체가 밤나무 숲



〈사진 5〉 대규모 표고버섯 재배 모습

꽃뽕마을은 농촌체험관광을 위해 준비된 마을

꽃뽕마을에 오면 사시사철 농촌체험관광을 경험할 수 있다.

봄에는 모내기를, 가을에는 알밤줍기와 고추따기체험을 할 수 있고, 맥문동으로 만든 마스크 팩 체험이나 맥문동 비누만들기, 그리고 지금은 폐광이 된 마을 뒷산의 박쥐동굴체험 등 언제든지 가족단위, 단체로 경험해볼 수 있는 끼리들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이곳 체험관에는 민박 시설도 운영하고 있어 식사는 물론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 6〉 모내기 체험행사



〈사진 7〉 고추따기 체험행사

충남 마을 기행 2 - 꽃뽕 마을



〈사진 8〉 박쥐동굴 체험행사



〈사진 9〉 맥문동 마스크팩 체험행사

무엇보다 4월중에 열리는 꽃뽕마을의 대표행사인 ‘맥문동 축제’는 올해 4회째를 맞았으며, 색다른 체험과 먹을거리, 놀거리들로 방문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사진 10〉 꽃뽕마을 특산물인 맥문동
를 차지할 정도다.

맥문동은 여러해살이풀로서 땅콩같이 굽어지는 뿌리를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하는데, 자양강장제로서 폐와 위장, 기관지에 좋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 청양은 충남 부여, 경북 밀양 등과 함께 맥문동의 주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청양은 맥문동 총 생산량의 37.5%

맥문동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맥문동 수확체험, 맥문동 화분 만들기, 맥문동 마스크팩 체험, 떡메치기, 꽃사탕 만들기, 비누만들기, 투호놀이 등 체험거리와 동동주, 파전, 맥문동 차, 맥문동 떡, 도토리묵 비빔밥 등 풍



〈사진 11〉 떡메치기 체험행사



〈사진 10〉 꽃피마을 특산물인 맥문동

성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또 2009년 자매결연을 맺은 ‘안산 브라보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도시민과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특히 청양의 특산품인 구기자를 비롯한 맥문동과 쑥을 넣은 반죽으로 국수를 뽑아낸 맥문동 칼국수는 어디서도 맛보지 못하는 꽃피마을만의 특선요리라 할 만 하다.

꽃피마을에서 만난 이춘복 이장(51세, 꽃피영농조합법인 사장)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즐길거리를 통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올 한해 우리 마을을 찾은 방문객이 맥문동 축제를 포함해서 약 8,000명이 넘는다.”면서 “특히 꽃피마을 뿐만 아니라 지역체험연구회와 여타 체험마을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다 맥문동과 꽃피마을을 전국에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마을에 대한 애정과 열성을 보이셨다.



〈사진 12〉 꽃피마을 이춘복 이장님



〈사진 13〉 충남발전연구원 - 꽃피영농조합법인 업무협약

이와 관련해서 꽃피마을은 ‘녹색농촌 체험프로그램’이나 ‘농특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이미 2006년도에 ‘꽃피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타 지역(대전 동구 가양2동, 인천시 도화1동 등) 및 기관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도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은 후 보다 본격적인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식을 갖게 된 것이다.

충남 마을 기행 2 - 꽃피 마을



〈사진 14〉 맥문동 축제를 비롯한 각종 마을 행사가 열리는 폐교의 가을 풍경
(현재 폐교된 화산분교 건물을 활용해 각종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 직접 둘러보진 못했지만, 꽃피마을에는 정혜산(355m)을 오르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절골마을과 정혜사, 상암 등을 거쳐 정상까지 올랐다가 내려오는 3시간 남짓의 5개의 등산코스도 경험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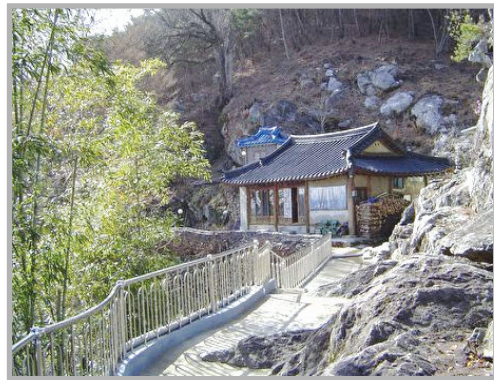
〈사진 15〉 꽃피마을에 설치된 정혜산 등산로 안내판

특히 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정혜사는 문화재자료 제151호로서 신라 문성왕 3년(841)에 혜조국사가 지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 517년경 전각이 모두 불타고 삼존불상만 화를 면했다고 한다. 16년 후 마곡사의 인명선사가 다시 짓고 여러 차례 보수·중건하였다. 1907년 큰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1908년 월파스님이 다시 지었다. 현재 절 안에는 삼존불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

과 산신각, 석굴암, 중암, 서암 등 암자가 있다. 정혜사의 현판은 3·1운동의 33인 중 한 분인 오세창 선생이 직접 쓴 것이라고 한다.



〈사진 16〉 정혜사의 모습



〈사진 17〉 정혜산 8부능선에 위치한 상암

가을하늘빛이 따뜻함보다 뜨겁게 느껴지는 10월의 어느 날, 꽃피마을에 도착한 필자와 연구원 일행을 반갑게 맞아주시던 마을 어르신들의 정겨운 웃음이 잊혀지질 않는다.



〈사진 18〉 야생화 ‘꽃향유’의 모습

필자는 꽃피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난 후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산 전체를 덮은 밤나무 숲은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는데, 한참 밤을 줍다보니 갑자기 가을햇볕에 반사되어 눈을 멀게 만들 정도로 눈부신 ‘꽃향유’라는 야생화가 한없이 펼쳐져 모습이 장관이었다. 마치 동화속에 나올 법한 숲속의 한 장면을 보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필자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마력이 있었다.

충남 마을 기행 2 - 꽃뽕 마을

회색빛 도시를 잠시 잊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알밤줍기, 고추대 뽑기, 은행털이 등 농촌봉사 활동을 하는 연구원들의 땀방울이 온 몸을 적실 무렵, 이곳 마을부녀회에서 제공된 점심식사는 꿀맛 그 자체였다. 맥문동차를 비롯하여 직접 재배한 고추, 버섯 등으로 요리한 맛있는 음식들은 허기진 배를 호강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저녁까지 이어진 농촌봉사활동은 비록 체험행사와는 다른 의미의 일정이긴 했지만, 머리로만 알고 지냈던 농촌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조금이나마 농촌의 일손을 도와드렸다는데 그 목적은 같다고 생각한다.



〈사진 19〉 꽃뽕마을 할머니의 모습

필자의 부모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시지만, 요즘 시골에는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도시로의 이탈 등으로 50대는 청소년(?), 60대는 청년(?)이라 불릴 만큼 젊은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런 와중에 이 꽃뽕마을처럼 주민 모두가 하나되어 영농조합법인까지 만들며 특산물을 재배·판매하고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면서 체험농촌마을로 일궈가는 모습이 참 소중하게 느껴졌다.

당분간 농촌이 어려운 현실은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생각해본다. ‘꽃뽕마을을 통해 희망을 얘기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사진 20〉 농촌봉사활동을 위해 경운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사진 21〉 커다란 알밤이 한아름



〈사진 22〉 은행털이범(?)들의 바쁜 손놀림

충남 마을 기행 2 - 꽃뒹 마을

[여행 수첩]

● 찾아가는 길

꽃뒹마을을 찾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그리 쉽진 않다. 주변 국도정비가 진행 중이고 초행길이라면 미리미리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길을 물어 가는 편이 낫다.

청양C(서천-공주간 고속도로)로 빠져 톨게이트 앞 학암삼거리에서 좌회전 후 6km 직진, 다음 장평사거리에서 장곡사 방면으로 우회전해서 3km 직진 후 부여 방면으로 좌회전 후 2km를 달리면 화산초교(폐교)가 우측에 보인다. 우회전해서 300~400m 더 들어가면 꽃뒹마을 체험관(장평명 화산리 524-2)이 나온다.

● 꽃뒹마을을 더 알고 싶다면

꽃뒹마을, 맥문동 축제, 농촌체험행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꽃뒹마을 체험관(041-943-8002)으로 문의하면 되고,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이장 어른 바꿔주세요' 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대 ^^

● 참고문헌

청양군 외, 2006, 꽃뒹골 농촌체험마을 육성사업계획서.

청양꽃뒹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http://www.맥문동.kr>)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해외의 전통시장 탐방

- 대만, 홍콩

임형빈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본 내용은 충남도 상인회의 해외 전통시장 연수계획에 따라 2010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 홍콩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1. 대만(Taiwan)

1) 대만(Taiwan) 개요

대만(Taiwan)은 36,000km²의 국토면적에 22,867천명(2007년 기준)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수도는 臺北(타이페이)이다. 타이페이는 272km²의 면적에 263만명(2007년)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대만의 주요 경제지표로 경제성장률은 2007년 5.7%, 국내 총생산(GDP) 규모는 2007년 394,789백만달러, 1인당 국민소득은 17,294달러이며 타이베이시의 1인당 GDP는 48,400 달러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타이페이의 대표적인 명소는 야시장으로서, 2007년 타이완 관광청 통계에 따르면,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1위는 유적지나 관광명소가 아닌 "야시장"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0도가 넘는 기후 탓에 야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현지 생활문화가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승화된 것으로 타이베이에는 타이완 최대규모의 스린(士林) 야시장을 비롯해 중형규모의 화시(華西街) 등의 명물 야시장이 있다.

2) 스린 야시장(士林夜市場)



스린 야시장 위치

젠탄역과 인접해 있으며, 지상의 오토바이 주차장과 지하의 자동차 주차시설이 있다.



스린 야시장 주변 교통시설(지하철역 오토바이 및 자동차 주차시설

현재 스린야시장은 두개의 범위로 나뉘어 있다. 한 곳은 전통양명 극장(陽明戲院)주변에 있는 거리로 대남로(大南路)의 자성궁(慈 宮)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한 곳은 스린시장 범위에 속하는 노점 구역으로서 음식노점상 구역으로 검담(劍潭)전철역 입구 정면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대로변부터 골목마다 빼곡하게 진열된 가판대에 육류滿漢滿漢결가금류등 먹을거리로 '음식 백화점'을 방불케 하며, 대만의 전통음식부터 스테이크, 닭고기, 두부요리, 과일젤리 등 다양한 음식을 팔고 있다.



스린 야시장 거리

야시장 인근에는 학교가 많아 학생들 위주의 소비집단이 형성되었고 가격도 일반 상점보다 저렴하다. 또한 대만인들의 외식 생활문화로 인하여 가족단위의 시장 방문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가구, 악세사리, 의류, 애완용품점등과 같은 상점들이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불링, 오락실 등 젊은이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위락시설들이 시장내에 들어서 있다. 전통적인 시장의 모습과 현대적인 의류, 화장품, 장신구 매장이 함께 위치하고 있어 마치 명동과 남대문 시장을 붙여놓은 듯한 거리 분위기가 공존하고 있다.



스린 야시장 내 쇼핑물

각종 먹을거리와 놀이문화, 최신유행 상품이 공존하는 시장의 이미지로 해외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있다.

3) 남문시장

남문시장은 타이베이의 90년 전통의 역사를 지닌 소매시장 중 하나였으나, 건물 현대화 이후 가공식품을 주로 다루는 전문시장으로 탈바꿈하였다. 1층은 육포와 훈제돼지고기, 말린과일과 과일, 향신료, 각종 가공음식류 등이 간편한 식사를 원하는 손님들을 집객하고 있다. 2층은 의류 상가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로 안정적인 진열체계와 편안한 동선, 밝은 조명 등으로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특이한 것은 건물내에 구청, 시장관리처가 함께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서를 찾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의 자연스러운 시장 출입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시 정부의 적극적인 전통시장 관리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 시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부차원의 시장관리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상가 개요

- 점포수 : 271개 (빈점포 14개, 5.1%)
- 사용층 : 지상 2층, 지하 1층
 - 지하 1층 : 어류, 정육, 음식 등 판매
 - 지상 1층 : 과일, 야채류, 훈제육, 생선조림, 무침, 튀김 및 조리식품, 떡 등 판매
 - 지상 2층 : 의류, 잡화, 관광용품, 화장품 등 판매
 - 지상 3·4·5층 : 행정기관(시장관리처, 중정구청 등) 위치





시장 내부

[타이페이시 시장처 방문 브리핑 및 간담회]

- 일시 : 6월 29일 9:30~11:00
- 장소 : 남문시장 3층 타이페이 시장처
- 면담자 : 시장경영과 계장 간려숙(簡麗淑)

대만의 전통시장과 상점은 총 55개소이며, 그 중 전통시장이 46곳, 전통상점이 9곳이 있으나, 예전에 비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현재 전통시장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는, 시설 노후화, 상점 경영자들의 노령화,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백화점, 대형마트등과의 경쟁 심화)등이 있다.

특히 대형마트 입지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또한 시장 활성화와 시장상권 보호를 위한 세금, 보조금의 정부정책은 예전에는 존재하였으나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상권보호와 관련한 노점상 대책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위생관리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노점상은 기존 상점과 공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시장시설 현대화 및 관련 정부 부처의 전통시장 관련 법규 정비하고 있다. 타이완시의 시장환경 재개발을 실시하고, 빈 점포를 줄이는 방안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3년간 6억 5천만 대만달러(약 250억원)를 투자하여 노후화된 시장내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시장시설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환경정비(조명, 화장실, 시장바닥, 배수), 조명, 건물관리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빈 점포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

두 번째로 시장 관리 전담 공무원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 정부의 시장관리 정책은 20여 명의 담당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마케팅 자원에서 시장내 점포들의 매출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ex. 시장별, 점포별 매출 경연대회 개최 등) 또한 빈 점포를 활용한 베틀시장 등 다양한 이벤트 도입하여 시장을 활성화 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 재개발시 상가형 시장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백화점식 점포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때 사람들의 생활 환경, 소풍 취향을 고려하여 시설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재개발을 통하여 활성화된 전통시장의 예가 다수 있다.

4) 디화지에 시장(迪化街)

디화지에 시장은 1850년대부터 시장이 만들어 졌으며 타이완 전역에서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 재래시장이다. 타이베이역에서 도보로 약 20분이 소요되며 약 800m의 거리에 500여 점포가 들어서 있다.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같이 공존하고 있으며, 거리 양쪽에는 대만 전역에서 생산된 곡식, 육류 등의 여러가지 물건들과 약재를 파는 상점이 입지하고 있다. 평소에도 많은 인파로 유명한 곳이지만, 특히 매년 설날때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 거리에는 청나라 시대의 건물과 일제치하 시의 바로크 양식의 건물이 시장 주변에 남아 있으며 현재는 보존을 위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각종 약재와 약초, 다양한 차, 건어물 등을 취급하지만 특히 약초를 판매하는 점포가 많았다. 시장의 구성은 품목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안쪽에는 쌀등의 곡식이 거래되는 도매시장이 있다.



디화지에 시장

5) 화시지에 야시장(華西街夜市)



화시지에 야시장 위치

도 거리에 화서가 야시장의 패루(입구 문)가 있다. 야시장 입구는 중국 전통건축양식으로, 붉은색 궁둥을 걸어놓아 특색 있는 시장 거리를 형성하였다. 시장 내부의 메인 거리는 천정시설이 되어 있으며 천정은 개폐식으로 유사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청나라때부터 타이베이 지역의 중요한 화물집중항구였던 이곳은 ‘고구마시’라고 불려졌고 화서가 주변에서는 ‘보두리’라고도 불렸다. 몇 년전부터 타이베이 시정부에서의 시장 정비 사업등을 추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먹거리 위주의 시장으로 산과 바다를 아우르는 여러가지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있으며, 특히 뽕, 자라 등을 판매하는 상점들도 있어 특색있는 먹거리 시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예, 그림, 부채 등 전통예술품을 취급하는 곳이 많아 대만의 전통특색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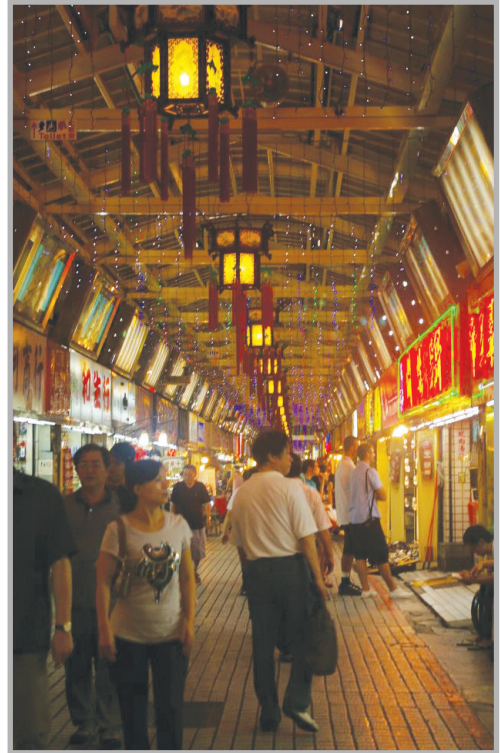
노점을 운영하는 상인들의 복장이 통일되어 있었으며 노점운영을 통제하에 관리되고 있었다. 적정한 노점의 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점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력을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화구에 위치한 화서가 야시장은 타이베이에서 가장 유명한 국제적 관광미식 거리로 유명한 곳이다. 이곳은 50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 보약, 한약식품, 공예품, 잡화, 전통음식 등이 유명하며, 특히 신선한 해물로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전철 판남선 용산사(龍山寺)역에서 하차하여, 광주(廣州街)로 진행하여 왼쪽에 있는 광주가 야시장을 거쳐 약 2분정



시장 및 주변 노점



시장 내부(천장개폐식)

2. 홍콩(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홍콩 개요

홍콩은 1,104km²의 면적에 2008년 기준으로 인구 6,943천명으로서 경제성장률은 2008년 4.5%, 2009년 - 3.1%을 보이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은 2,933억달러(2009년), 1인당 국민소득 29,826달러(2009년)이며 산업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으로서 그 비중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 항구는 물동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항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서 대외 은행 교역량으로 세계 15대 은행 센터이다.

2) 스텐리 마켓(Stanley market)

홍콩섬의 최남단 스텐리반도 끝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해변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어항과 해수욕장, 숲으로 둘러싸인 고급 빌라들이 위치하고 있다. 스텐리 마켓이 있는 지역은 예전에는 어촌마을이었으나 지금은 해수욕장과 시장, 노천바(Bar), 고급 레스토랑이 다수 입지하고 있다. 시장에는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품목들이 많으며, 악세사리, 민속품, 의류, 골동품등을 팔고 있다.



스텐리 시장 입구

시장 좌우로 스텐리만 연안의 산책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주변에는 해산물 레스토랑이나 각종 음식점이 있어서 유럽의 시골 해변 정취를 느낄수 있게 한다. 스텐리 지역은 기존 어촌마을의 어촌 기능이 쇠퇴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광형 시장으로 변화하여 발전하였다. 기존 어촌마을의 오래된 창고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상점, 음식점, 노천바등의 상업시설로 이용하고 있었다. 스텐리 시장은 해외 잡지사를 통하여 시장을 소개하는 홍보 마케팅을 꾸준히 펼쳐 유명해진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해변가 주변 노천바

주요 품목은 실크의류, 중국 전통 옷, 인형, 기념품, 중국 공예품 등으로 관광형 시장임을 알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노천바는 스텐리 시장 해변가에 위치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태국 요리 음식등을 팔고 있다.



시장 내부 골목

3)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Temple Street)

템플 스트리트 야시장은 Jordan 과 Yau Ma Tei in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120년 전통의 홍콩 야 시장이다. 서울의 황학동 시장 같은 중고 물품과 토속 기념품을 파는 좌판들이 많이 있으며, 비교적 값이 싼 소품, 기념품, 토속음식을 파는 상점이 입지하고 있다. 오후 4시부터 12시 까지 야시장이 열리며 야시장이 열리는 시간동안 도로를 차단하여 보행자의 편의와 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야시장은 '남자들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남성패션 아이템이 많은 시장이다. 노천 의 음식과 간식으로 유명하며 주로 해산물을 요리하는 음식점들이 많았다. 이곳의 노점들 역시 허

가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특색있는 것은 거리가 끝나는 곳에 점술가들이 모여 있었으며 경극을 하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다.



야시장 주변 점집들



야시장 주변 노점



시장 내부



4) 홍암시장(Hung Hom Market)

홍암시장은 홍콩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가형 시장으로서 수산물, 육류, 야채, 채소등을 파는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시장 운영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7시 까지이며 2층의 푸드센타(시장에서 산 물건을 조리해 주는 상점)는 새벽 2시 까지 운영하고 있다. 특히 2층의 푸드센타에서는 시장에서 산 식재료를 가지고 가면 음식을 조리해 주는 음식점이 입점해 있어 외식을 하는 홍콩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



시장 내부



푸드센터

시장 4층에는 시장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식품환경위생서(Food and Environment Hygiene Department) 산하 공무원이 시장에 상주하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시장시설 관리는 민간의 관리회사에서 하고 있으며, 시장의 청결, 건물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시장의 질서유지와 시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통로 이용을 위하여 통로바닥에 상품진열 금지라인이 그려져 있으며, 상점마다 이 라인 밖으로 판매대가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3. 시사점

해외 전통시장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관리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해외 전통시장 역시 대형마트등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위기감이 있으나, 적극적인 공공의 개입으로



홍암시장 입구



시장관리 모습



시장 내부

[홍암시장 방문 브리핑 및 간담회]

- 일시 : 7월 2일 9:30~11:00
- 장소 : 홍암시장 4층
- 면담자 : 식품환경위생서(Food and Environment Hygiene Department)
산하 시장관리 장영윤(張榮潤)

홍콩의 상설시장은 200개가 있으며, 시장 규모에 따라 공무원이 3-5명씩 상주하고 있다. 홍콩의 상가형 시장은 관리의 편리성과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0-80년대부터 현대화하기 시작하였다. 홍콩의 전통시장 역시 대형마트와 경쟁관계에 있어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

홍암시장의 정문은 대로와 접하고 있고, 후문은 주택가와 접하고 있는 상가형 시장으로서 시장관리는 주로 식품위생과 시장의 청결, 시장관리, 음식물 검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시장시설의 관리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의 전반적인 협의 및 관리는 시장상인대표와 공무원, 관리업체가 공동으로 협의하고 결정한다. 시장 경영 위원회(Market Management Consultative Committee, MMCC)에서 시장에 관련 정부시책, 이슈, 조정 역할을 담당하며, 이 위원회는 시장대표관계자, 시민, 구의원등이 참여하고 있다.

상점의 임대료는 월세로 운영되며, 업종마다 매출 및 이윤이 틀리기 때문에 업종마다 월세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푸드센터, 해산물 등의 상가 임대료가 비싼 편이다. 빈 점포 발생시 공개 경매를 통하여 새로운 운영자에게 운영권 주는 형태로 시장이 경영되고 있다.

시장 지하를 주변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하치장을 설치하여, 구역내 쓰레기 처리하는 공동 시설로 이용중에 있다. 그리고 같은 건물안에 공공도서관, 동사무소 등 공공시설이 복합화하여 입지하고 있다.

시장 경영 역점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 ① 식품 신선도 유지에 따른 식품위생 향상
- ② 현대식 대형마트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개선
- ③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 마케팅 전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고 있었다. 홍콩의 경우에는 200여 개의 시장에 식품환경위생서 공무원을 파견하여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에는 지자체 산하 시장관련 업무 조직이 종합적인 시장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 전통시장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관광 목적의 야시장과 내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재래시장과의 시장경영의 정책적 차이점 존재하고 있다. 내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의 경우에는 위생과 편의를 위하여 상가형 시장으로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형 시장의 경우에는 각국의 전통적인 생활 모습을 바탕으로 차별적인 시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관광형 전통 재래시장의 발전은 주민들의 생활상에서 나오는 생활양식,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좋은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중국인들의 다양한 식생활, 외식문화, 생활모습 등의 생활양식과 지역적 특성인 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한 야시장을 잘 조화시킨 결과이다.

② 전통시장의 경우 무조건적인 시설투자 보다는 지역의 특색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장내 전통적인 문양, 상징물 활용하고 있었으며, 홍콩 스텔리 마켓의 경우 새로운 시설 투자 보다는 기존 어촌 마을의 시설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시장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었다.

③ 상가형 시장으로 재개발시 다른 기능들과 복합화시켜 개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가형 시장의 경우 시장건물과 공공의 관청, 시립 도서관, 시립 스포츠 센터 등의 시설과 복합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조성하고 있었다. 홍콩 홍암시장은 시장관리 사무소, 동사무소, 스포츠센터, 시립 도서관과 복합화 되어 있었으며, 대만의 남문시장은 같은 건물 내에 타이페이 시장채, 중정구청이 입지하고 있었다.

④ 시장 구역 내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위락, 문화시설이 유치되어 있었다. 시장내 오락실, 볼링장, 아케이드를 조성하여 시설적인 측면에서 젊은이들의 유입을 모색하고 있다.

⑤ 시장 내의 활력을 위한 노력과 질서유지를 위한 규제 정책이 모색되고 있었다. 시장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점을 허용하되 위생 및 질서 측면에서 관리하여 집객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복장을 통일하여 관리하는 등 관리가 가능한 측면에서 노점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장 이용객들의 원활한 통로 이용을 위하여 통로바닥에 상품진열 금지라인을 그려 상점마다 이 라인 밖으로 판매대가 나오는 것을 금지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⑥ 공무원, 시장상인연합회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정부시책, 시장현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고 있었다. 홍콩의 시장 경영 위원회(Market Management Consultative Committee, MMCC)를 통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⑦ 홍보, 마케팅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홍콩 스텐리 마켓은 해외 잡지사를 활용하여 세계적인 관광형 시장이 되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학습력 강화

홍승오 | 충남다문화지교육센터장



해가 갈수록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세계화로 인하여 지식이 폭증하고 있으며, 국가단위의 응집성이 약화되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총체적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문제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 같은 사회문제의 극복과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적·개인적 수준에서의 평생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되게 되었다.

특히, 지식기반사회 및 지식기반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식생산과 지역문화 창달이 요청되고 있음을 물론, 이에 따라 지식 창조의 주체로서 인간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지역 문화 자원의 창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교육은 학교교육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평생학습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나 지역사회 모두가 실천해야 하는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평생학습은 한 도시 내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사회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신이 필요로 하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교육시설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학습자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역 평생학습 기반 정비라는 관점에서 시급한 일은 학교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및 일반 지역사회자원을 망라하여 교육자원을 조사, 발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교육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지역학습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평생학습 관련 기관 및 시설, 단체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시설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유화하는 것이다. 즉, 교육기능의 확산과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의 시설을 한 시내(市內)에서, 혹은 시(市)간, 시와 도(道) 간에 공유하는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스포츠 및 문화시설, 도서관 등의 복합시설화 및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과 같은 대상 중심 시설의 복합화도 필요하다.

이와 같이 지역의 평생교육 연계 및 협력 체제는 그것을 구성하는 주체가 학습 지원에 유용한 교육자원(educational resources)을 가지고 있을 때 성립된다. 이를 전제로 서로 다른 교육조직 간에 서로 보유하고 있는 교육 자원들의 상호 교환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충남평생교육정보센터, 2006).

이와 같은 좋은 예로 호주의 학습도시 에블린(Mt. Evelyn)은 지역의 다양한 부문간의 커뮤니티케이션 확대를 고무(鼓舞)하고 지역 주체간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의 학습요구를 면밀히 분석하고 학습기회와 인프라스트럭처를 확대함으로써 기술을 발전시키고, 네트워크와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민들의 기술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있다. 영국의 경우, 노팅검(Nottingham), 텃포드(Thetford), 노위치(Norwich), 에딘버그(Edinburgh), 리버풀(Liverpool) 등 40여개의 학습도시들은 상호간의 사업추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교환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학습지역프로젝트에 대학, 지역노동사무소, 지역상공회의소, 시민대학, 교육문화시설 등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 및 참여하여 지역의 학습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한 지역에 존재하는 평생교육 기관들이 협력관계라기 보다는 사업이나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행정적인 계열이 다르면 그 정도는 더욱 심각하다. 오늘날은 무 경계의 시대이다.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평생교육관련 시설들간의 네트워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평생학습네트워크 성공을 위한 10대 원칙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 간의 공동 이슈나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원활한 네트워크가 구축되기 위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한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각 기관의 부담금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셋째, 관습적인 이해관

계를 존중한다. 각 기관의 역사 및 구조, 가치, 지도력 등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한다. 넷째, 서로가 공동의 관심사와 동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섯째, 네트워크 사업의 중심에서 논의한다. 중심이 되는 사업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주변적인 과제로 확산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섯째, 각 기관들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은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기관들은 자기 기관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다. 각 기관이 지니고 있는 장단점을 바르게 평가해야 한다. 일곱째, 모든 기관의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기관이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 여덟째, 가시적인 성과를 획득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각 기관들이 스스로 현실적이고 계측 가능한 결과를 볼 때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홉째, 안정적인 협의체를 구성한다. 열 번째, 명성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명성이 각 기관에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지역사회의 인정은 구체적으로 교환되는 가치와 함께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수행될 때 한 기관이 개별사업을 추진하면서 점(點)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평생교육사업을 통하여 여러 기관이 종합적으로 네트워크 되면서 면(面)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의 성과는 전략적 네트워크에 얼마나 전념하여 결과를 내느냐 하는데 있다. 이 같은 의식의 개혁이 없는 한 지역의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일 뿐이다. 이제는 각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제한된 고객을 서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평생학습 분위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교학상장(敎學相長)을 실천하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충남평생교육정보센터, 2006, 현장에서 보내는 평생학습 실천 노하우
2. 한국교육개발원, 2005, 지역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매뉴얼
3. 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도시 성공전략 길잡이
4. 한국교육개발원, 2007, 평생학습도시 가이드북

민선 5기, 장애인 정책에 바란다.

황영란 |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지난 주 토요일, 모처럼 예당저수지를 다녀왔다. 예당저수지는 해마다 대여섯 번은 다녀올 정도로 자주 간다. 그렇지만 예당저수지는 나에게 그림과 같다. 언제나 차 안에서 감상만 했기 때문이다. 산책로는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정돈되었고, 조각 공원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건물들도 많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는 외국만큼이나 먼 곳이다. 남편이 오랜 외국 생활을 마

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은 예당저수지 산책로를 따라 한 시간 이상을 헤매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을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온 기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 없이 그 사회의 문화를 누리며 산다. 그렇지만 중증의 장애인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결단과 노력을 해야만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 11월 중순의 예당저수지는 낙엽도 풍요로웠고, 태풍 곤파스를 이겨 낸 사과도 탐스러웠으며, 방갈로 좌대에 앉아 낚시하는 사람들도 유난히 여유로워 보였다. 나 또한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차도 마시고 싶었고, 시원한 매운탕도 먹고 싶었지만 동양 최대 크기라는 예당저수지를 지척에 두고 그 날 역시 드라이브로 만족하고 돌아와야 했다.

5년 전, 「장애인동료상담」이라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을 접했다. 이미 타 시도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해 온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이 충청남도에서는 새로운 장

애운동으로서 이슈화되는 시기였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단계를 다섯 가지로 나누면서 각 욕구는 하위단계가 충족된 후에야 상위 단계의 욕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첫 번째 단계인 생존의 욕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 때문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처음 사고를 당했을 때는 휠체어 위에도 앉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 밥을 먹고, 용변을 보고, 잠을 자는 일조차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일정에 맞추며 살았다. 그때의 기억은 스스로 밥을 해먹고, 화장실을 다니게 된 후에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시기에 접한 「장애인자립생활」 이념은 마치, 머리에 자진이 일어난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절반의 실패를 예고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을 무능하고 수동적이며 배타적이게 만들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을뿐더러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다보니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주장하고, 선택하는 일에 서툴렀다.

그렇지만 민선5기가 출범하면서 충청남도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당사자 욕구에 맞는 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추어 장애계도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오랫동안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하며 방관했던 담당공무원들도 달라져야 한다. 어느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세력 갈등과 기득권 싸움은 있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고 대중에게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참으로 시대는 사회적 영웅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바다 속을 알기 위해서 수면 위를 보는 사람은 없다. 조개를 깨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수면 위에 떠 있는 사람은 없다. 필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충청남도 16개 시·군을 순회하며 자립생활이념을 교육했고 그 곳에서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만났다. 때로는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몇몇 장애인들의 삶만 윤택하게 할 뿐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답답했다. 장애인 정책의 전달체계가 평가방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러한 답답함은 계속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전달체계에 있는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치료사, 시설장, 단체장 들의 윤리의식이 중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 가치관이 필요하다.

장애는 보통의 장애인들에게는 약함이 되지만 특정인에게는 힘과 권력이 되기도 하다. 그래서 때로는 대중이 인질이 되기도 한다. 산등성이에서 맞는 바람과 정상에서 맞는 바람은 처음부터 다른 바람이었던 것처럼 매서움의 깊이가 다르다. 민선5기 장애인 정책은 밑으로부터의 소통과 대화를 끌어내 표면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이 아닌, 더디고 느리더라도 가장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장애는 그 유형만큼이나 욕구도 다양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군가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장애인자립생활이념」조차 접하지 못하고 절대적 고독과 차별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밖의 장애인들일 것이다.

내포신도시, 소통과 대화로 명품도시 만들기 힘 모은다

- 교육청, 경찰청, 수공 등 16개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건설종합관리협의회 정례회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청, 수공 등 16개 기관의 실무과장과 팀장 등이 참여하는 건설사업종합관리협의회를 금년도에 4번째로 12월 7일 도청사 현장 상황실에서 전병욱 도청 이전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분기별로 개최하는 건설사업종합관리협의회는 2012년말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공정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충남도가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로드맵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도청사(공정율 31%)와 부지조성공사(41%)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2010년도 말과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발주할 교육청사, 경찰청사 공사추진 계획과, GS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이 추진하는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집단에너지설치사업과, 상수도, 통신, 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관련기관 간 공정일정 등에 대하여 16개 관련기관 실무책임자들의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기관 상호간 소통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건설종합관리협의회는 2011년도에도 분기별로 개최하여 내포신도시 개발사업이 당초 로드맵에 따라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18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

— 대상에 수산분야 편현숙 씨 등 11명 수상



제18회 충청남도 농어촌발전상 시상식이 12월 7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한 수상자 및 수상자 가족, 관련 농어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수상자중 영광의 ▲대상은 수산분야 편현숙(47세, 보령 오천)씨가 차지했으며, 분야별 수상자로는 ▲작목부문에서 △식량작물분야 - 최상묵(53세, 당진 우강), △원예특작분야 - 연종흠(71세, 천안 입장), △축산분야 - 김정숙(50세, 부여 석성), △임업분야 - 김영국(55세, 부여 은산)씨가 수상했으며 ▲시책부문에서는 △환경농업분야 - 부여 소부리영농조합법인(대표 이체철), △유통가공분야 - 김용희(60세, 천안 입장), △수출분야 - 서정만(66세, 당진 정미)씨가 수상했다.

그리고 ▲지원기관부문은 공주연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안중화), ▲단체부문은 농촌지도자아산시연합 둔포지회(회장 김도일), ▲특별상은 김완성(60세, 금산 금성) 농가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상을 받으신 분들은 척박한 현실에 굴하지 않고, 숭한 역경을 이겨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신 분들이기에 어느 해보다 값지고 의미있는 상”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행보 본격화

— 국회의원 및 전문가 초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 추진전략 논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청권 3개 시도 및 발전연구원은 12월 3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국제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충청권 공동포럼”을 열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마련을 모색했다.

이번 행사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 유한식 연기군수,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각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인사말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최근 정부 및 여당 내에서 세종시 원안 추진으로 과학벨트의 입지를 원점으로 돌아가 공모에 의해 선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세종시 논란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청권 3개 시도는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남대 강병주 교수는 “현재의 사회구조가 수직적 사회에서 수평적사회로 변화하는 것처럼 집중형 과학연구단지에서 통합형 과학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입지선정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국가과학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입지선정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남대 조만형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먼저 논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이 되었지만, 오히려 충청권 3개 시도가 소지역주의에 빠져있거나 너무 방관적이지 아니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충청권 3개 시·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까지 포용하면서 국가 정책을 받아드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김용웅 박사(前 충발연원장)의 사회로 유환준 충남도의회 부의장, 한양대 김용균 교수, 이상선 분권 균형발전전국회의 공동대표, 오용준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강영주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채성주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앞으로 충청권 3개 시·도는 공동포럼을 충북, 대전 순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은 물론, 충청권 민·관·정정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동양기전(주)과 투자협약 체결

－ 차세대 유망 자동차부품(자동차용 DC모터) 업종 아산에 유치



충남도가 차세대 유망 자동차 부품업체를 유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복기왕 아산시장, 양재하 동양기전(주) 대표이사는 11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아산 도고농공단지 내 39천㎡에 자동차용 DC(Direct Current) 모터공장을 이전 투자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금번 투자협약으로 동양기전(주)는 2014년까지 340억원을 투자하여 고용 500명,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아산 도고농공단지 내 확보부지에 자동차부품 생산라인을 건설하게 된다.

충남발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MOU체결로 연관 산업과 연계해 볼 때 향후 5년간 충남도에 1천억원의 생산유발과 500여명 고용창출, 40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차세대 유망 자동차 부품업종 유치로 관련업종 산업집적과 함께 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우리 도의 전략산업인 자동차 부품 유망기업인 동양기전(주)의 도내 입지를 환영하며, 동양기전(주)가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부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 내년도 예산안 4조5,336억원 의회제출

– 재정건전성 기초유지, 복지·환경·농림분야 중점편성

- 충청남도는 민선 5기 출범 첫해인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 충남도 재정의 전체규모는 전년 대비 6.9%인 2,921억원이 증가(4조2,413억원→4조5,334억원)한 4조5,336억원으로 나타났다.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3조5,828억원(33,427 35,828), 전년대비 2,401억원/7.2%증가
 - 특별회계 6,348억원(5,808 6,348), 전년대비 540억원/9.3%증가
 - 기금운용 3,160억원(3,178 3,160)은 18억원/0.6% 감소하였다.
- 충청남도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우편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 ARS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10월 20일 전국 최초 선진국형 Town Hall Meeting 형태의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민선5기에 중점 추진해나갈 10대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였다.
- 충남도의 내년도 예산안 특징으로는
 - ① 민선 5기 출범 첫해로 지방채 발행이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유지하여 재정건전성확보에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대규모 투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도청사 신축에 따른 세출수요를 국비확보를 통해 충당한다는 배수의 진을 친 결과로 마지막까지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② 또한 도정여론조사, 도민참여 전략회의 및 참여 소통위원회·농수산혁신위원회 구성·운영 예산 등 민선 5기의 화두인 “참여와 소통”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이다.
 - ③ 민선 5기 7대 도정역점과제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점 반영하여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 도정 7대 역점과제 분야별 예산 반영 현황으로는

- ① 소통과 신뢰의 지방행정 구현 : 1,425억원(4.7%)
 - 낙후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 534,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27, 도서종합개발 89, 소도읍 육성 79 등
- ② 21세기 혁신 농수산업 실현 : 6,825억원(22.3%)
 - 쌀 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1,112, 친환경농업기반조성 421, 산림자원육성 538, 원예특작생산기반시설확충 319 등
- ③ 균형있고 내실있는 충남 경제 육성 : 1,767억원(5.8%)
 - 지방산단 공업용수 건설 436, 기업이전보조금 259,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107, 2011금산세계인산엑스포 76 등
- ④ 평생을 책임지는 행복교육 실현 : 212억원(0.7%)
 - 초중학교 무상급식 75, 농어촌방과 후 영어학교 19, 혁신형 행복학교 4, 전문계고 해외 인턴십 3 등
- ⑤ 선진국형 맞춤형복지 · 환경실현 : 13,260억원(43.4%)
 - 기초노령연금 1,912, 기초생활보장급여 1,728, 영유아 보육료 지원 1,079, 농어촌하수도 관리 등 2,316, 농어촌상수도관리 등 395, 만5세아 무상보육료 17, 아동희망프로젝트 264 등
- ⑥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충남 : 1,473억원(4.8%)
 -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정비 166, 백제문화권유적정비 및 고도보존육성 127, 공립예술단운영 50, 문화예술진흥 63 등
- ⑦ 사람중심 생활환경 조성 : 5,599억원(18.3%)
 - 지방도안전관리 459, 수해상습지개선 424, 재해위험지구정비 461, 국지도확포장 413, 도청 및 의회청사신축 · 진입도로 783 등

○ 내년도 예산안은 도정역점과제별 균형있는 재원배분으로 민선5기 도정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안정성 확보에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오늘 하루 당신이 충남도지사입니다

—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통하여 도민의 힘을 직접 체험



충남도는 10월 20일 롯데 부여리조트에서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선진국형 주민참여방식인 “21세기 타운홀 미팅” 형태의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충남도가 주최하고 충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제1차 충남도민 정상회의에는 지역주민 115명, 정당인 49명, 시민단체 55명, 직능단체 56명, 전문가 50명, 도·시군 공무원 48명 등 각계각층의 도민 총 373명이 참여하였다.

참여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8명(2.1%), 30대 49명(13.1%), 40대 138명(37.0%), 50대 128명(34.3%), 60대 이상 50명(13.4%), 성별로는 남성 298명(79.9%), 여성 75명(20.1%)이다.

정상회의는 10시부터 16시까지 전자투표 방식으로 1차에서 3차 회의로 진행되었는데 1차 회의에서는 민선5기 도정환경에 대한 공감도와 도정추진의 우선 고려요인을 평가하고 도정의 8개 분야 59개 과제 169개 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3개씩 총 24개의 전략과제를 선정하였다.



이어 진행된 2차 회의에서는 사전 주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와 분야별 우선과제를 중심으로 한 10대 핵심과제를 평가하고 3차 회의에서는 10대 핵심과제 결과발표 및 과제이행을 위한 행동대안과 이해관계자별 행동대안을 제시하고 도지사가 회의결과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이 시도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이번과 같은 도민회의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내생적 발전 토대 구축해야



최근 중앙정부가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발전연구원은 12월 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충남연 연구진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생적 지역발전과 지역산업의 육성전략”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단국대학교 김태연 교수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의 농촌지역발전정책으로 제기되었던 신내생적 발전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업체 및 사업네트워크의 육성, 지역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학습지역의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이사장은 “충남의 향토자원은 총 599건으로, 이중 자연자원은 277건, 인적자원은 43건, 기술자원 51건, 작품자원 72건, 특산물자원 156건 등으로 구분되며, 이는 산업·문화·복지·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향토자원의 발전을 위해 향토자원 지식보유자와 지식수혜자를 연결할 수 있는 지식전문위탁관리기관 및 오픈마켓 운영, 그리고 향토자원지식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산업 지원정책의 재편 방향에 대해 발표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오은주 박사는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을 집중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전략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특화산업을 산업도시형, 종합

도시형, 농공복합형, 그리고 농산어촌형 등으로 구분하여 전략의 차별화와 더불어 지역산업진흥종합계획 수립과 전문가 컨설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는 목원대학교 박경 교수의 진행으로 청운대학교 김동청 교수, 충남대학교 안기돈 교수, 충남테크노파크 한무호 지역산업평가단장, 충남도청 윤호익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적·학술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 박사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성과 산업적 파급성에 기반한 지역산업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산업과 농업클러스터의 접목, 지역산업육성조례 제정, 지역산업의 기업화지원체제 구축,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조성 준비 박차

—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화된 브랜드 전략 강조



충남도는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함께 10월 29일 대전스파피아호텔에서 대학 교수 및 전문가, 충남연 연구진, 도와 시·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천수만 중심의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서산 바이오웰빙특구, 관광지 7개소, 관광자원 개발계획 10개소 등 총 12조 8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제발표에 나선 경동기술공사 박찬일 전무이사는 “천수만 권역은 태안, 보령, 서산, 홍성 등 4개 시군이 접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와 가까운 지역으로써 충남도와 서해안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천수만 지역으로의 접근성 문제, 다양한 관광기능의 혼재, 계절적 관광성향 등을 해결하기 위해 천수만 지역의 특화된 브랜드 개발과 환경친화적 관광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과의 연계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양대학교 지진호 교수는 “동북아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1995년도에 41백만명으로 전세계 관광객의 7.8%였으나 2010년 104백만명으로 10.5%, 2020년엔 216백만명인 14.4%로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천수만 지역 역시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한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및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자원화와 고유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일종합기술공사 이대구 부사장 역시 “천수만 지역은 첨단산업레저형 기업도시와 웰빙특구 등 대규모 개발이 추진중”이라면서 “국제적 관광휴양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지, 서해안 관광의 거점 기능 및 주변 지역과의 연계, 천수만 관광 브랜드화 등의 추진 전략에 중점을 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연구실장의 주재로 배재대 박근수 교수, 청양대학 최영문 교수, 그리고 충남도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천수만 국제관광휴양도시 건설을 위한 올바른 방향 수립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충남발전연구, 청양 꽃피영농조합법인과 업무협약 체결

- 고추대 뽑기 등 농촌봉사활동으로 연구생활에도 활기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과 청양 꽃피영농조합법인(대표 이춘복)은 10월 22일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에 위치한 ‘꽃피마을’에서 연구원 관계자, 마을이장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마을 경쟁력 강화와 상호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실 충발연은 지난 2007년 3월 꽃피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인연으로 매년 봄에 열리는 ‘맥문동 축제’에 맞춰 이곳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특산물 등을 구매해 왔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담긴 ▲농촌마을 및 산업체 등의 교육 및 컨설팅과 정보 공유, ▲농촌 네트워크 구축, ▲공동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활발한 협력관계를 갖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꽃피마을을 함께 찾은 충발연 임직원 60여명은 고추대 뽑기, 은행털기, 밤 줍기 등 봉사의 땀을 쏟으며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충발연 고승희 박사는 “잠시 농촌 일손을 도왔다고 해서 농촌의 현실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부모님같은 어르신들을 위해 땀 흘리는 것만큼 보람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방향" 워크숍 개최

－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보교류의 기회 마련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10월 20일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방향”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충청남도, 9개 시·군 총량제 담당자,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 등 관련자 25명이 참석하였으며, 충청남도 안대현 박사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개정(안) 설명”과 김영일 수질총량관리센터장의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추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은 중앙정부(환경부)에서 개정중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변동사항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충청남도의 종합의견,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주요 변동사항에 따른 시·군 차원의 준비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었으며, 시·군 총량제 담당자들은 발표내용에 대한 많은 관심 뿐만 아니라 열띤 질의와 토론도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남도수질총량관리센터에서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는데 있어 해당 시·군 담당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2회 2010충남공공디자인대전 개최



지난 2010년 11월 16일 제2회 충남공공디자인대전이 충남 공주시 디자인카페에서 진행되었다. 충남공공디자인대전은 2010년 7월 9일 공모전 발족을 위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8차례 정기회의의 진행과 협의를 하였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홍보 그리고 대내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총 18명의 추진위원을 위촉, 추진회를 구성 하였고, 약 3개월에 걸친 홍보활동과 3주 동

안 두 차례에 걸친 접수와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최종 수상작들이 선정되었다.

총 응모작품수 236점 중에서 1차 심사결과 70점이 통과하였고, 2차 심사를 통하여 대상 1점 금상2점 동상 3점등 총 64점이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건양대학교 인테리어학과 3학년 유민지, 강혜림 팀의 '공주, 백제로 물들다'가 선정되어 부상으로 500만원이 수여되었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준비 되었고, 사실상 첫 회인 전국단위의 공모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236점이라는 많은 작품이 접수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충남발전연구원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서 공주시의 적극적인 협조 및 관심으로 공동 주최하게 되었고, 이에 공주시 디자인카페 및 문화원의 지원으로 원활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며, 충남을 대표하는 옛 고도 공주시의 유구한 역사와 백제의 문화는 충남도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앞으로도 이어질 충남공공디자인대전을 통하여 충남도민에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도록 하며, 충청남도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원 고 모 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 정책제언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 원고투고 |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 참조 (작성요령, 투고신청서 등)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 840-1122 팩스 (041) 840-1129 E-mail : shnam@cdi.re.kr

「충청지역연구」 제6호 논문 모집 안내

「충청지역연구」는

1. 충남발전연구원(CDI)이 발간하는 충청지역의 상생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각 분야별 학문적 발전과 우수한 연구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문학술지입니다.
2. 본 학술지는 1년에 2회 발간이 원칙이며, 매년 6월말, 12월말에 발간됩니다.
3. 원고 투고 분야는 농촌개발, 도시 및 지역계획, 지방행정, 문화예술 및 관광, 산업경제, 환경생태 등으로 한정하되, 충청지역과의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논문이어야 합니다.

논문 투고 및 게재

1. 투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논문 원고”와 “논문투고신청서”를 아래의 E-Mail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지역연구” 담당자

[314-140] 충남 공주시 금홍동 101번지

T : 041-840-1122 / F : 041-840-1129

E-mail : shnam@cdi.re.kr

2. 원고 마감 : **5월말일 도착분에 한함**
3. 심사 후 채택된 원고에 한해 **100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4.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중이거나, 또는 기 게재된 논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일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고는 본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확정됩니다. 또한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6. 「충청지역연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cdi.re.kr)를 참조하십시오.
7.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밑거름이 될 학술지인 「충청지역연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